

2014년 충남 남부권역 상생협력·갈등관리 정책포럼 민관 협동워크숍

- 일 시 : 2014. 11. 13(목)~11. 14(금)
- 장 소 : 덕산 리솜스파캐슬 리조트



■ 2014 충남 남부권역 민·관 협동워크숍 ■

□ 목 적

- 충남 남부권역의 공공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전문교육 및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에 전문교육을 통한 갈등관리 조정능력 향상과 현장중심의 포럼 운영위한 사례 발굴 통해 실천지향적인 토론장 구축
-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포럼 조직 운영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및 지역 사회 갈등 조정자 역할 수행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4. 11. 13 13:30 ~ 11. 14. 15:40
- 장 소 : 충남 덕산 리솜 호텔
- 인 원 : 약20명(갈등관리심의위원, 포럼위원, 공무원)
- 주 최 :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주 관 : 충남 남부권역 상생협력 . 갈등관리포럼
- 내 용 :
 - 갈등문제해결의 성공과 실패 “한일”, “한중” 상생협력 방안, 미래사회변화와 상생협력.
 - 국방대학원 이전에 따른 충남 남부권역 4개시군 상생협력 방안, 상생협력 방안 및 민군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구성안 토론
- 주요참석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정 형 식	상임공동대표
안 기 전	공동대표
김 용 수	남부권역 정책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유 주 열	한중투자교역협회 자문대사
최 진 하	충남도 정책 특보
최 병 학	한국갈등관리학회 회장
최 한 규	선문대 정부관계연구소
박 경 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장

□ 워크숍 일정

● 11월 13일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 참석자 등록	
14:00-14:10	◦ 개 회	
14:10-14:20	◦ 개회사	남부권포럼 상임공동대표
14:20-15:10	◦ 전문가 특강 1 - 지역갈등관리의 민주적 접근방식	최 진 하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15:10-15:20	◦ 휴식	
15:20-16:00	◦ 전문가 특강 2 - 국내 갈등문제해결의 성공과 실패	김 용 수 (남부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16:00-16:10	◦ 휴식	
16:10-17:00	◦ 전문가 특강 3 - 한·중 상생협력 현안(경제, 정치)	유 주 열 (前 중국대사)
17:00-17:10	◦ 휴식	
17:10-18:00	◦ 전문가 특강 4 - 미래사회와 상생협력	박 경 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18:00	◦ 폐 회	

● 11월 14일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50	◦ 전문가 특강 5 - 국방대학원과 충남남부권역 4개 시·군 상생협력방안	최 병 학 (충남발전연구원)
09:50-10:00	◦ 휴식	
10:00-10:50	◦ 전문가 특강 6 - 민·군 상생협업체 구성방안	최 한 규 (북부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10:50-11:00	◦ 휴식	
11:00-12:00	◦ 자유토론 - 민·군 협업체 구성안 필요성	
12:00-13:00	◦ 오찬	
13:00-14:00	◦ 이 동(아산시)	
14:00-15:00	◦ 현장견학(상생협력 우수사례) -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15:00	◦ 폐 회	

■ 목 차 ■

□ 발표 자료

- 지역갈등관리의 민주적 접근방식 5
[최진하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 국내 갈등문제해결의 성공과 실패..... 19
[김용수 충남남부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 동북아정세를 통해서 본 상생협력을 위한 한·중·일 관계..... 31
[유주열 前 중국대사]
- 미래사회와 상생협력..... 43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 국방대학원과 충남 남부권역 4개 시군상생협력 방안..... 79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 회장]
- 민·군 상생협약체 구성방안..... 99
[최한규 충남북부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 부 록

- 충청남도 남부권포럼 일반현황..... 109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9

제1주제

지역갈등관리의 민주적 접근방식

최진하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지역갈등관리의 민주적 접근방식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 지역갈등관리의 민주적 접근방식

갈등조정지원센터

목 차

- I . 지역갈등의 이해
- II . 갈등관리와 민주주의
- III . 갈등의 민주적 관리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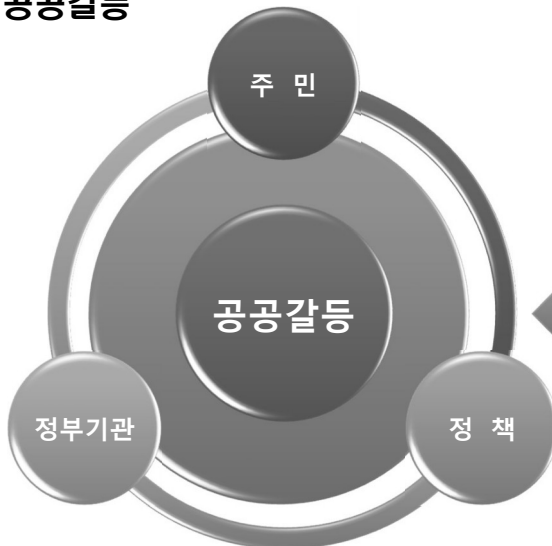
1. 지역갈등의 이해

갈등조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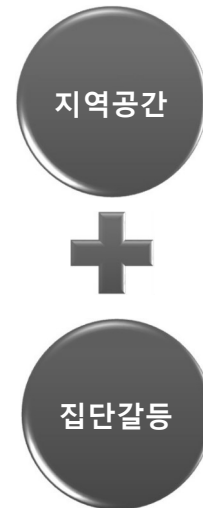
1. 지역갈등의 개념과 유형

1) 지역갈등의 개념

• 공공갈등



• 지역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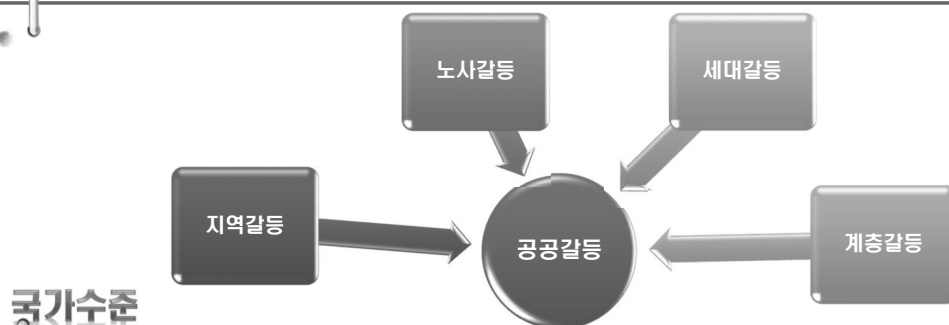


1. 지역갈등의 이해

갈등조정지원센터

1. 지역갈등의 개념과 유형

2) 지역갈등의 유형



국가수준



지역수준

1. 지역갈등의 개념과 유형

2) 지역갈등의 유형

- 갈등대상자에 따른 구분

관계 쟁점	수직적 갈등	수평적 갈등
이해갈등	지방정부-주민	지방정부-지방정부 주민-주민
가치갈등	지방정부-지역 NGO	지역 NGO-지역NGO

2. 지역갈등의 변화와 특성

1) 지역갈등의 변화

- 민주화, 분권화 이전

정치갈등

DAD정책결정

중앙-지방

- 민주화, 분권화 이후

이해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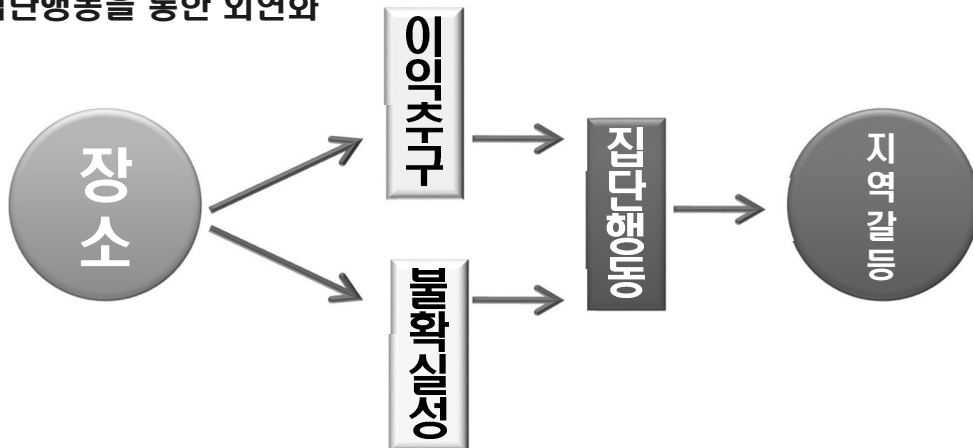
주민참여
[수직적 갈등]

지방-지방
[수평적 갈등]

2. 지역갈등의 변화와 특성

2) 지역갈등의 특성

- 장소의 정치
- 생활세계의 불확실성
- 지역이기주의
- 집단행동을 통한 외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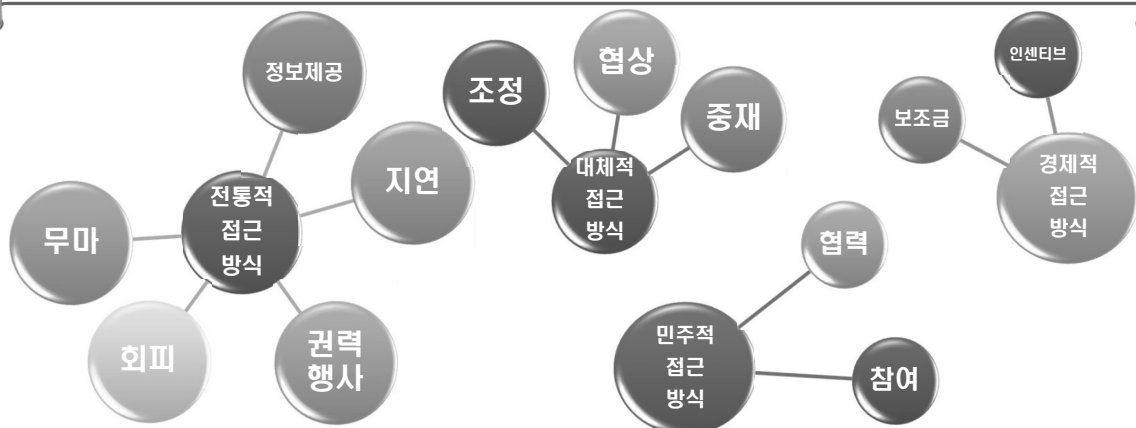


3. 지역갈등관리의 문제점과 대안

1) 갈등관리의 개념

- 동태적 과정
- 갈등확대의 방지 및 소모비용 감소

2) 갈등관리의 유형



3. 지역갈등관리의 문제점과 대안

3) 갈등관리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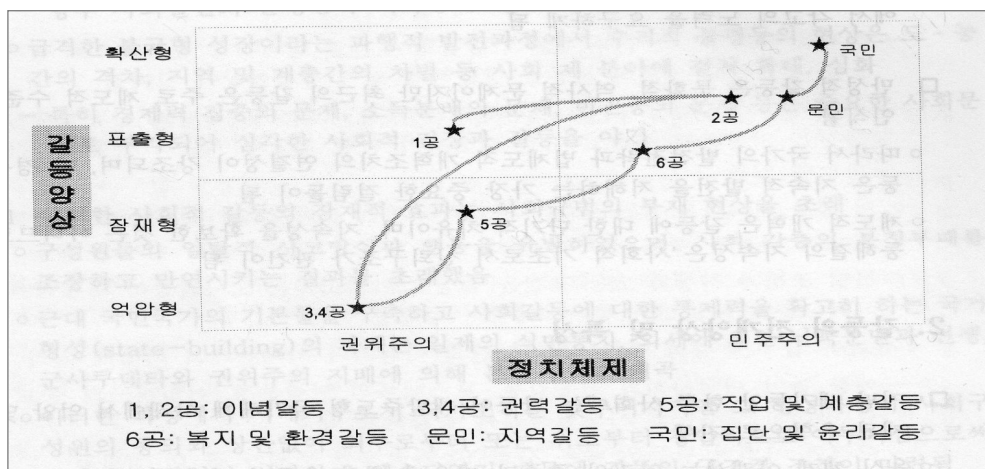
-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갈등관리 시스템의 적용

정책과정	의제설정및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갈등관리방법	-갈등영향분석 실시	-대체적 갈등해결방법	-합의안수행여부 평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행정소송심판직권 중재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갈등관리의 목적	사전적 예방	사후적 관리	차후 갈등의 예방

II. 갈등관리와 민주주의

1. 갈등과 민주주의의 관계

• 갈등의 분출



• 갈등의 순기능 도출 → 민주적 관리양식의 필요성

2.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성

• 성공적 갈등관리란

수용성

지속성

변화된 관계

•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성

절차적 합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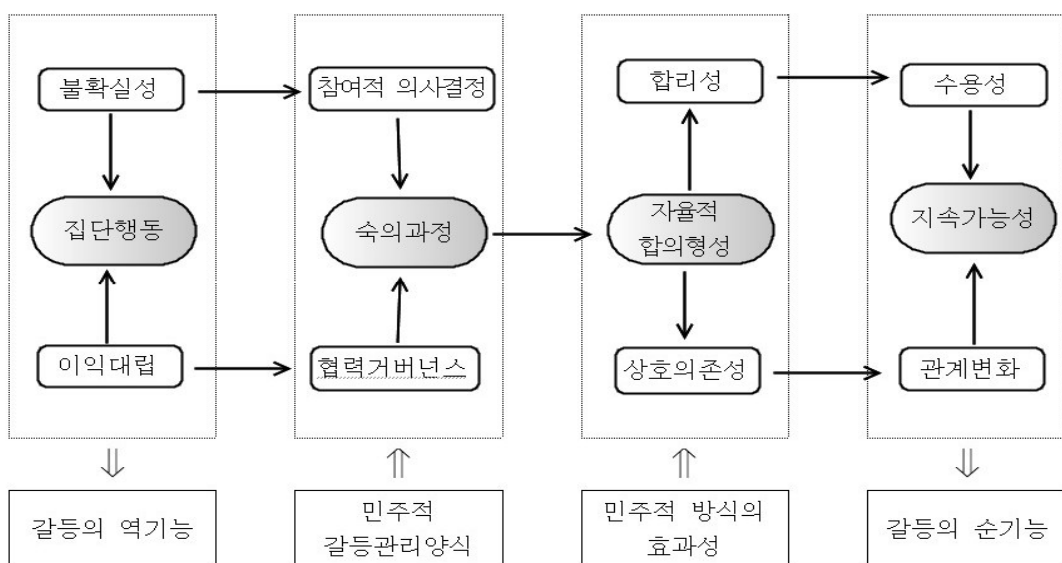
자율적
합의형성

상호의존성

II. 갈등관리와 민주주의

2.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성

민주적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의 순기능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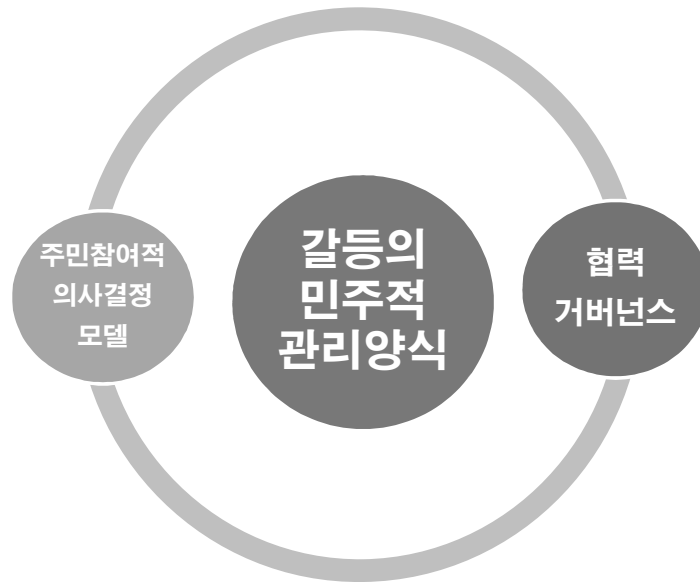


III. 갈등의 민주적 관리양식

갈등조정지원센터

1. 갈등관리와 협력거버넌스

갈등의 민주적 관리양식



III. 갈등의 민주적 관리양식

갈등조정지원센터

1. 갈등관리와 협력거버넌스

1) 협력거버넌스의 개념

•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1. 갈등관리와 협력거버넌스

1) 협력거버넌스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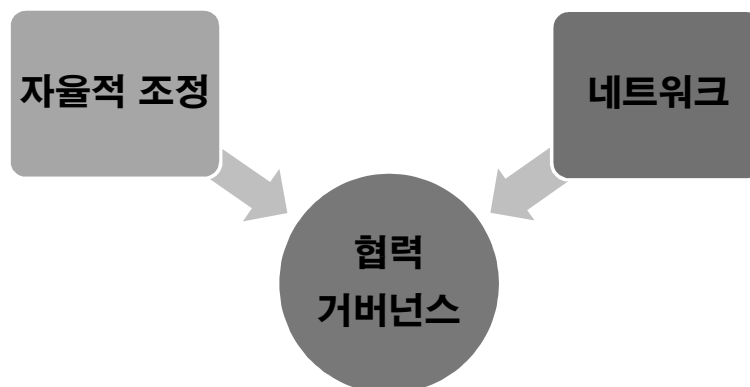
• 갈등관리의 협력거버넌스

- 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
- ② 비정부조직이나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 ③ 양방향 의사소통과 다자적 상호작용
- ④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집합적 행동
- ⑤ 승자독식이 아닌 의견일치 추구
- ⑥ 사익이 아닌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1. 갈등관리와 협력거버넌스

2) 협력 거버넌스의 조건

- 자율적 조정 - 자율규칙 형성
- 네트워크 - “보이는 협력하는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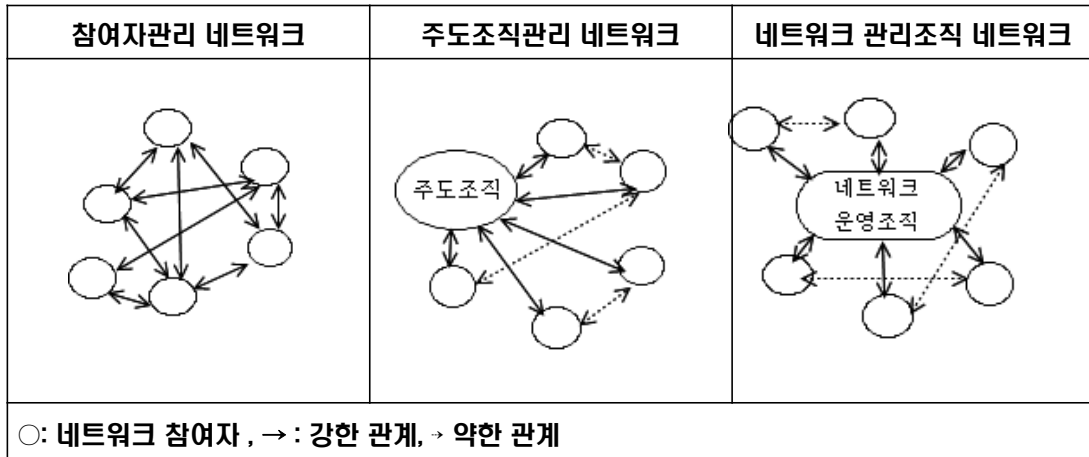
III. 갈등의 민주적 관리양식

갈등조정지원센터

1. 갈등관리와 협력거버넌스

2) 협력 거버넌스의 조건

•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



III. 갈등의 민주적 관리양식

갈등조정지원센터

1. 갈등관리와 협력거버넌스

3) 협력 거버넌스 기구의 운영과 문제점

주요 기구	주요 기능	근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도시무의 갈등관리관련 사항의 심의	충남조례(제3544호)
갈등조정협의회	-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기구	충남조례(제3544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광역행정기관간의 갈등조정 - 광역행정기관과 기초행정기관과의 갈등조정	지방자치법(제149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기초행정기관 간 갈등조정	지방자치법(제149조)
행정협의회	- 2개이상 지자체와 관련된 사무의 조정	지방자치법(제152조)
지방자치단체조합	- 2개이상 지자체의 공동사무를 심의,의결	지방자치법(제159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갈등조정	지방자치법(제168조)

2. 주민참여적 의사결정

1)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과 필요성

정책추진방식	시민참여양식	갈등관리양식	갈등관리기법
정보제공 [information]	정부→시민 [일방향] 정부가 시민에게 일방적인 정보전달	가부장적, 억압적	홍보책자발간
협의 [consultation]	정부↔시민[쌍방향] 정부가 규정한 쟁점에 대해 시민이 피드백 제공	갈등의 사후적 해결/ 사법적 해결	공청회, 여론조사
적극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	정부↔시민[상호작용] 시민이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에 최종 결정 책임	갈등의 사전적 예방	시민배심제

2) 참여적 의사결정의 조건

- 일반시민의 참여 - '평범한 지식'
- 숙의적 합의 - 심사숙고 → 성찰적 전환

2. 주민참여적 의사결정

3)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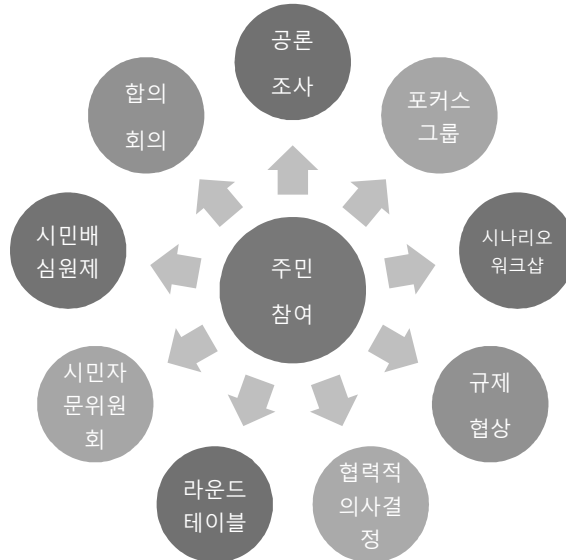
• 시민참여의 단계와 유형

시민참여의 유형	목적	예시
일반적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 일반시민의 의견수렴 기회는 없거나 매우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책자 등의 자료배포 - 뉴스자료 배포 - 대중매체에의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 의견반영의 기회는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하우스 운영 - 공청회 - 여론조사
참여적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 시민적 여론에 대한 숙의 - 숙의 후 도출된 여론이 정책에 반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론조사 ② 포커스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 대한 숙의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 - 정책의 형성을 목표로 숙의 - 숙의 후 도출된 결과가 정책에 반영 - 반드시 합의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시나리오 워크숍 ④ 규제협상 ⑤ 협력적 의사결정 ⑥ 라운드 테이블 ⑦ 시민자문위원회 ⑧ 시민배심제 ⑨ 합의회의

2. 주민참여적 의사결정

3)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

- 주민참여적 의사결정 모델(국문 참조)



2. 주민참여적 의사결정

4) 참여적 의사결정의 성공요인

- 일반시민의 공적 참여와 대표성 확보
- 충분한 정보와 학습기회의 제공
- 심사숙고의 토의 과정
- 공정하고 의지있는 전문적 진행자
-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
2013-01 갈등관리의 이해 책자의 일부
자료입니다.

제2주제

국내 갈등문제해결의 성공과 실패

김용수 (충남남부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국내 갈등문제해결의 성공과 실패

2014년 11월13

충남 남부권역 포럼 김용수

목 차

1. 갈등의 원인

2. 이등박문

3.이하응 (대원군)

4. 이하응과 이등박문

5. 시대별 평가 흐름

I. 갈등의 원인

➤ 가치관(價値觀)

가치에 대한 관점. 가치 의식 (생활이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
첫째는 행위가 옳고 어떠한 행위의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 기준
둘째는 어떠한 상태가 행복 불행 판단 기준

자본주의 가치 판단 기준 → 편리 → 이익 (권력, 경제적이익)

➤ 가치(價値)의 정의

재화나 용역의 교환과정에서 지불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추정치를 또는
재화와 용역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측정치를 말하며, 교환과정에서의 가치
및 특정소유자에 대한 가치는 평가의 목적 및 소유자에 따라 각각 달라 질 수 있다.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준 2014.06

I. 갈등의 원인

1. 행복 가치 기준 상이

현 시점 필요한 공익사업. 미래 어느 시점에서 불필요한 사업 일수 있음

경복궁 사업, 4대강 사업 : 금일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 이었던가
비용은 누가 ?, 이익은 누가 ?, 피해는 누가 ?

1-1.행복 "선 경제개발논리" : 돈(이익) 중시하여 자연 환경 및 인간존엄 등 파괴)

1-2.미래 행복 : 현재 이익이 장기적 이익(가치기준 변화)을 보장 하지 않음

1-2-1 . 돈→건강, 행복, 환경보존의 가치미래)

2. 공공사업 목적 → 공익 → 사업주체 선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

2-1. 공기업 : 기본적으로 공익 추구 (금일 현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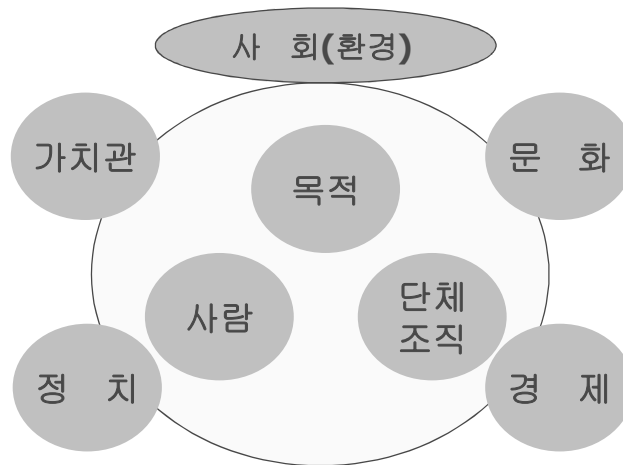
2-2. 사기업 : 공익보다는 기업 이익을 최우선

2-3. 공익사업 진행

2-3-1. 비용(국민" 정부"), 이익(국민, 기업체), 피해(일부국민, 장단기 피해)

I. 갈등의 원인

가치관의 충돌



II.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

1) 출생과 청소년기



- 가. 1841년 10월 ~ 1909년 10월 야무구치현 스오구니 촌
- 농민 출신의 하급 무사 가문 출신
 - 성 : 하야시 - 이토 (아버지가 이토 다케베에 양자로 입양)

- 나. 청소년기 : 신분이 낮아 문벌가문 자제로부터 무시와 박대
- 스승인 요시다의 부국강병론과 애국사상 전수
 - 유교사상에 근간 충효 및 존왕사상과 막부타도와 천황직할통치 주장

- 1863년 1월 영국대사관 방화
 - 1863년 2월 천황폐위 주장 자문역 국학자 살해
- 나- 1. 1863년 5월 영국 유학 (장주 5걸 중 1인)
- 사전 1권, 잠옷 1벌 유학길
 - 알렉산더 윌리엄슨 런던대 교수집에서 하숙
 - 박물관, 성곽, 해군시설, 공장 등 견학

- 나- 2. 존왕론자에서 개국론자로
- 영국과 일본의 국력의차이를 보고 개국론자로 변혁
 - 일본 국내 전쟁 소식에 1864년 6월 귀국

II.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

2) 정치 활동

가.

- 1864년 12월 보수파 타도 거병참여
- 막부 타도 정변 계획
- 보수파와 막부지지세력과 투쟁, 혁신파 세력 구성참여

나. 메이지유신 시대

- 막부세력 타도 후 천황에게 전권양도

다. 정치 활동

- 외국 사무국 판사, 관현 효고현 지사, 초대 공부성장관
- 1871~1873 이와쿠라 사절단일원 서양 각국 시찰
- 귀국 후 정한론 논쟁에서 시기상조 의견표명
- 오키나와 주민 피살이유로 대만 침략 결정 후 권력자들간의 갈등 봉합으로 선후배 정치가들로부터 신임 얻음

라. 권력장악

- 1878년 막강한 권력자 오쿠보 피살로 뒤를 이어 내무상 승진, 천황과 고관들을 설득 헌법제정 건의, 정적인 (오쿠마세게노부) 딸과 부정행위로 권력 기반 위협)
- 1885년 갑신정변때는 청국에 파견 천진조약에 참여

II.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

2) 정치 활동

가. 일본제국 헌법제정 참여

- 1881년 급진적 영국식 내각책임제 (안) 제출 좌천
- 1882~1883년 8월 (유럽출국) 독일제국 헌법제정연구
- 1883년 8월귀국 후 국내성취조국 "장관" 헌법 기초임무
- 1883년 입헌제 도입 (내각제도) 후초대 총리 취임
- 1888년 5월 헌법초안 심의위해 초대 추밀원 의장 총리직 사임
- 1887~1889년 2월헌법 공포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 중요성주장
- 1892년 천황중심의 강력한 법치주의, 국수정당 주장 천황에 의해 좌절

나. 2번째 총리직 수행

- 1895년 청일 강화조약, 을미사변
- 1896년 총리직 사임 영국 여왕 즉위 사절 영국방문
- 3번째 ~ 4번째 (1900년 9월) 총리직 수행

II.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

3) 외교 활동



II.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

2) 외교 활동

- 가. 1901년 9월 구미 순방 "미국 예일대 명예박사학위 수여"
- 나. 영국과 일본 동맹 (1902년 2월)
 - 1901년 11월 러시아와 동맹 추진 무산
- 다. 1904년 2월 원로자격으로 어전회의에서 참석 러일전쟁 결정
 - 전쟁결정 후 고종방문 협조 강요
- 라. 1905년 10월 "조선외교권박탈" 내각통과 후 조선에 조약 강요
 - 같은해 11월 을사조약 체결 및 초대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 취임
 - 총독 취임 후 황태자 이은의 스승 명목으로 이은과 일본 행
- 마. 1907년 7월 고종 양위 주도 (헤이그 밀사 사건 계기)
- 바. 1909년 다로총리, 고무라 외상, 이토 조선 강제병합 결정
 - 1910년 8월 22일 조인 (29일 발효)

II.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

2) 사 망

가.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 역 사망

- 대한제국 의병 참모 중장 "안 중 근"에 의해 저격 당함
- 하얼빈, 장춘, 대련 도착 후 방부제 처리 후 일본에서 국장

나. 사망 후 순종은 文忠 시호를 내림고 은사금 10만냥 전달

다. 이등박문의 사상과 신념

- 개화론자
- 여성교육에 앞장 (여성 교육이 중요성 강조)
- 부국강병론자
- 천황제 폐지 주장, 지방 (막부) 세력 제압 후 천황에게 전권 위임

III. 이하응

1) 출생과 생존



가. 1820 ~ 1898

- 1843년 (헌종6년) 흥선군에 봉해짐
- 안동김씨 세력 아래 살기위해 파락호생활
- 스승: 추사 김정희

집권기 추사 김정희 문하생 다수 임용

나. 1863년 12월 아들 명복, 왕위계승으로 섭정 (1863 ~ 1873)

- 유교적 기조아래 富國強兵
- 집권기간 서원철폐 (1,000 → 47)
- 중앙집권적 단일지배체제 확립 (비변사 기능 의정부로 이관)
- 왕권강화 목적의 경복궁 중건 (당백전 발행, 청전 수입으로물가급등, 국력낭비)
- 양반에게도 세금 부과 (호포제 시행 1호당 2필)

III. 이하응

2) 조선의 대외환경

가. 통상요구 거절과 중, 영 아편전쟁

- 1832 ~ 1860 영국선박 로드암허스트호 통상요구 거절 (충청 홍주) 30여차례 통상요구 이양선 출몰
- 제1차 아편전쟁 (1840 ~ 1842) 5개월 후 남경조약체결 소식 전해짐 侵漁之弊 (영토침해 행위 없다 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음)
- 제2차 아편전쟁 (1858 ~ 1860) 광둥성 (영국에 내지통상권 허용), 북경합락 천주교허용, 배상금 지불

나. 러시아의 남하

- 1864년 육로 (두만강) 통한 통상 요구로 위기위식 자극
- 선교사 (베르뢰) 의 편지 (1864년 ~ 1865년 대원군 접촉) 대원군이 프랑스이용 러시아 통상요구 막고자 하는 내용 기술 러시아를 막으면 종교 자유 얻을 수 있다고 언급

다. 일본 1854년 미국과 수교

- 1867년 프랑스 조선 중재 제안

III. 이하응

2) 조선의 대외환경

라. 1866년 7월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 로즈 박해사실 확인

- 조선을 식민지 또는 보호령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 본국 보고

나. 미국과 프랑스 독일

- 1866년 5월 서프라이즈호 평안도 철산 표착 (인도적 중국 송환)
- 1866년 7월 미국선박 제너럴셔먼호 무력도발사건 발생 (대동강)
- 1866년 8월 1일 청으로부터 프랑스 조선 침략 경고 받음
- 1866년 8월 13일 프랑스 군 한강 측량 후 자신의 함대만으로 서울 장악 불가 판단 9월 7일 강화도 점령
- 1866년 12월 미국 와추세트호 황해도 장연 출현
- 1868년 3월 미국 세난도어호 대동강 하구 출현
- 1868년 4월 독일 상인 오페르트 2번 통상요구 거절에 대원군 아버지묘 도굴 시도 불발 "부장품 이용 통상요구 시도"
- 1871년 1월 미국, 청을 통해 조선 방문예정 통보 (미국 침략승인) 4월 강화도침입 전사자 3, 부상자 10 자진철수 (조선 350명 전사자)

III. 이하응

3) 조선의 대응

가. 조선의 대응

- 1848년 (헌종 14년) 대마도주 10여척 이양선 북상 알려움에 따라 군사대비한탄 (영의정 "권돈인" 국왕 및 신하 학문정진 필요성 강조)
 - 왕 (철종 11년) 의 대처방안 요구에 체재유지를 위한 內修강조 (군주 도덕성과 민심동요방지 목적의 지방행정관임명)
 - 人臣無外交 : 청의 신하로 독자적 외교 할수 없다
 - 일본에 이양선 출몰 사실 알리고 공동 대응 모색
- 가- 1. 프랑스는 청의 예부를 통해 조선에 통보 (통상교섭 시도)

나. 이하응 (대원군) 대응

- 1865년 12월 이하응 (대원군) 중간연락책 (승지 남종삼) 통해 선교사 (프랑스 군 이용) 만나 러시아 남하 방비책 강구 모색 (선교사 지방 선교활동으로 만남 불발)

나- 1. 정치적 위기

- 1866년 2월 베르뇌 서울에서 체포 (남종삼, 홍봉주) 고종에 보고
- 남종삼 죄목 : 러시아 변란에 대비해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 프랑스와 교섭 시도
- 이하응 : 신속 대대적 천주교 탄압 실시 (1866 ~ 1873)

III. 이하응

4) 이하응 (대원군) 대외정책

가- 1. 초기 대응

- 유원지도 (柔遠之道) 외국선박 인도적대우 방침 준수,
- 평화적 해결 불가 시 유인 후 격퇴 지시

가- 2. 강경대응 (독일상인 1868년 오페르트 도굴사건 이후)

- 오페르트 일행 선제공격으로 퇴각 유도
- 전국 포수모집하여 결사 항전
- 미국통상요구에 (1871) 조선 선제공격 (미군 강화도 침입 후 철수) 청에 전투 사실을 통보 함과 동시에 전투 종식

나. 사대교린 (事大交隣)

- 서양과 외교 마찰 시 청에 알려 신하의 예를 다함
- 일본에 통보 공동대응 모색 후
- 일본과 서양 동일 시 취급 (1867년 프랑스와 조선 중재 시도)

IV. 이하응과 이등박문

이하응

- 신 분 : 왕 족
- 정 치 : 40대 (1963~)
- 기본사상 : 유고사상, 부국강병 통상거부 (쇄국정책)
- 정권유지 : 10년 "섭정기간" 타의로 권력 양도
- 개혁 → 보수파
- 왕권과 지배층간 갈등 왕권강화목적 경복궁 중건
- 국내갈등 해결위해 대외위기부각
- 외국과 통상 거부로 선진문물 수용 기회 상실

이등박문

- 신 분 : 농민 무사계급
- 정 치 : 30대 (1971~)
- 기본사상 : 유고사상, 부국강병 영국유학 후 개화론자
- 정치 입문 후 지속적 개혁참여
- 천황폐위론 : 지방세력 타도및 권력양도 (천황)
- 일반국민 정치참여 중요성 강조
- 여성교육 앞장
- 천황중심체제로 국방강화 전력 (선진문물 자주적 수용)

V. 이하응평가 시대흐름

- 일제강점기 (박은식) : 부족한 배움과 고집으로 조선 아픈 역사 초래
- 이선근 : 국제정세 어둡고 독단적 대외정책 처리 새로운 문화 접촉 기회상실
- 80년대 "성대경" : 체제안정 (쇄국정책) 위해 국제정세 대처를 위한 역량 카운지 못함
- 90년대 "연갑수" : 쇄국↔개국 이분법을 벗어나 부국강병을 강조 쇄국의 개념을 비판 (실제로 부국강병 ?)
- 00년대 "김병우" : 자주권 실현측면, 내정개혁, 국방력강화정책 강조
- 강병규 : 중국의존 의식에 정면돌파하고 자신감 고취를 가져옴 반면에 조선 대외입지 약화, 세계정세 인식 불가 초래

감사합니다~!

자료원 바탕 재구성

- 1 . 대원군의 대외정책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상의 변천 연세대 역사교육전공 오승영 2011
- 2 . 흥선대원군의 개혁정과와 그 한계성 이매수 2001
- 3 . 이토히로부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지식산업사 2002
- 4 . 이토히로부미 근대국가 구상 2008
- 5 . 위키 백과

제3주제

동북아정세를 통해서 본 상생협력을 위한 한·중·일 관계

유주열 (前 중국대사)

중국. 중국인 이야기

(Geography is destiny.)

유 주 열 (한중투자교역협회 자문대사)

* 삼성 이건희 회장: "앞으로 중국(중국어)를 모르면 먹고 살기 힘들 것"

* 페이스북,저커버그:"我想要學習中國文化"

1. 중국(세계 GDP 2위) 급속성장배경

가. 정치적 안정으로 경제발전 우선

-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나. 유리한 생산 및 시장여건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소비시장

-천년의 축적 문화

다. 12차5개년계획(2011-2015)

- 경제성장(量) 보다 경제발전(質)

- 내수확대- 개인소득확대

라. 미국 추월 전망

- PPP(구매력평가지수) vs 일인당 GDP

2. 한중관계 급속 발전 요인

가. 지리적 인접성

- 서울-베이징(950km) 서울-도쿄(1150km)

- 일의대수(一衣帶水)

나. 중국발전지역- 중국동부

-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 동부 연안 : 국토9.7% 인구35% GDP 60%

다. 아시아의 지중해

- 중국과 한반도의 황해(서해)

라. 문화적 유사성

- 한자문화권. 유불교문화권
- 중국몽 vs 가치외교
- 공자와 은행나무
- 이백의 조발백제성

마. 한중 경제

- 한중교역 > 한일교역 + 한미교역
- 인적교류- 유학생 교민 여행자

바. 신(新)차이나 쇼크

- 중국인(돈)이 몰려온다
- 요우커(遊客) 감동제조업

3. 비즈니스와 중국문화

가. 중국인은 실리적 혈연적 애국적

- 10억 상인 (向前看 向錢看)
- 관시(關係)
- 애국무죄 (항일데모)

나 중국인은 대륙적 유연성

- 地大物博과 酒池肉林 * 남귤(橘)복지(枳)
- Big Picture 사고 (山 川 人 日)
- 上有政策 下有對策
- * 차이나는 차이나(China)

다. 양(羊)의 문화 vs 패(貝)의 문화

- 도덕 정신(soft) (美. 善)
- 물질 부패(hard) (財. 賄)

라. 대륙(land) vs 섬(island)

- 위계질서 (農業) (禮. 儀典)
- 마(馬)씨 3총사
- 東西南北 vs 北南東西
- 개인주의 고립 (isolation)
- * 창포(菖蒲) 와 상무(尙武)

마. 중화 중독(中毒)

- 인명의 중국화 (宋. 洪. 柳)
- 국지명의 중국화 (高麗. 漢陽. 安東. 州. 市)
- 한자의 코드화 (日本. 越南. 正宗. 東. 休. 仙)
- * 백우(白羽) 선생 * 기(氣)의 삼국지
- * 국회배지와 무(武)측천

바. 피휘(避諱) 문화

- 관세음(觀世音) vs 관음(觀音)
- 현무문(玄武門) vs 신무문(神武門)

4. 중국인의 징크스

- 가. 숫자 - * 4- (死) * 8- (發) * 9- (久)
- 나. 동식물 - *사슴(鹿)- (祿) *박쥐(蝠)- (福)
*생선(魚)- (餘) *배(梨)- (離)
- 다. 기타 - *시계(鐘)- (終) *우산(傘)- (散)
- 라. 국명 - * 안남(安南) *지나(支那)

<참고> 중국인과 인문교류 : 李白(701-762)의 조발백제성

조사백제 채운간 (朝辭白帝 彩雲間)

천리강릉 일일환 (千里江陵 一日還)

양안원성 제부주 (兩岸猿聲 啼不住)

경주이과 만중산 (輕舟已過 萬重山)

(아침 일찍 동트는 백제성을 출발하여 천리 떨어진
강릉까지 하루 만에 돌아가네. 험곡 양안의 원숭이
울음소리 끊어지지 않고, 내가 탄 조각배는
단숨에 수많은 산을 지내 왔구나)

일본의 우경화와 동북아 경제

○ 갑오년(2014)의 명암

금년은 갑오년이다. 갑오년은 청마(靑馬)의 해로 말처럼 앞으로 내 달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120년 전의 갑오전쟁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갑오 청일전쟁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예언처럼 동북아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를 가져 올 기존의 강대국 중국(淸)과 신흥 강대국 일본(日本) 간의 전쟁이었다. 120년 후 지금 청일전쟁 이후의 동아시아의 질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갑오년이 다시 돌아왔다.

해양굴기를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을 배후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의 탄생과 함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자위권(collective self-defence)행사 등 일본의 심각한 우경화는 이 지역의 불안을 더해 주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후의 질서(regime)하에 평화헌법으로 소극적인 평화주의를 택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기존의 질서를 새로 바꾸어 보겠다는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권력서열 2위인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 제1비서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여 군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불안도가 증대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년은 동북아 지역이 가장 불안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0년 전의 청일전쟁 외에도 110년 전에는 러일전쟁 100년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도 상기된다.

○ 일본의 우경화 배경

2012년 12월 일본의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굴복시킨 자민당은 아베 총재를 총리로 지명하고 여세를 몰아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도 압승 강한 일본(Strong Japan)의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였다.

미국 하바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1930-) 교수의 “일본 최고(Japan as No.1)”라는 책이 발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GDP 세계 2위의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았다. 이 책은 급부상하는 일본에 대한 경고음(warning bell)으로 미국은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여 그 후 일본의 경제는 침체되고 정치는 무력해져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일본 사회는 건강성과 여유성을 상실하였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의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과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건은 일본으로서는 내외외환의 좌절이

었다. 일본인들에게 정치 사회적 폐색감이 늘어나고 과거 영광의 대일본 제국으로 회귀코자하는 바람이 날로 커지고 있었다.

더구나 일본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반면에 떠오르는 중국은 GDP로는 일본을 능가하였다. 중국은 일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G2 국가의 반열에 올라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반면에 일본은 지는 해로 무시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도 조기 글로벌 화(化)로 성장의 속도가 빨라 한일 두 나라의 GDP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의 성장이 “전자 일본”의 프라이드를 심어 준 소니 와 도시바 같은 전자업계를 제패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자동차 산업도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넘보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산업은 과거 일본 기업의 하청이나 받는 수직적 관계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평적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과거 후발 신흥국으로 대우했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를 거두고 자국 중심의 외교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일본의 유명한 월간지 분게이 쉰주(文藝春秋)는 2013년 10월호에서는 “한중(韓中)과 백년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일본에 대한 한중의 압박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 아베 총리의 친미행보

2006년도 이미 총리를 경험한 바 있는 아베 총리는 일본을 스스로 비하하는 자학사관(自虐史觀)에서 일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긍사관(自矜史觀)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주장한 일본 정체성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우선 경제를 살려내야 했다. 그는 침체된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1) 금융완화 2)재정확대 3) 성장전략 등 이른 바 “3개의 화살”을 제시하는 “아베노믹스”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아시아 중심외교에서 미일동맹 강화에 외교력을 집중하였다. 아베총리는 “Japan is BACK”이라고 강한 일본의 복귀를 선언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이 자신의 필생의 과업(life work)이라면서 지난 해 10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식년천궁(式年遷宮)행사에 직접 참석하고 12월에는 우방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야스쿠니 (靖國)신사참배를 감행하여 국내적으로 강한 일본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예상

조부로부터 우경화의 DNA를 물려받은 아베 총리는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

상이 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극복하면 장기 집권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7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의 압승으로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이 완전 몰락 분열되어 아베의 자민당은 당분간 라이벌 없는 집권당이 되었다. 자민당이 2016년 예정된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승리할 경우 아베 총리는 6년의 집권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해 예산 통과가 거부되어 일시 샷다운(shutdown)된 바 있는 미국은 예산 자동삭감(sequester)과 중동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장성택 숙청으로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놓여 있는 동북아 안전보장을 일본에게 대폭 위임할 태세이다. 일본은 차제에 미국의 안보의 짐을 받아들이면서 재무장의 명분을 삼으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미국의 입장을 불편하게 하였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발 빠르게 후텐마(普天間)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헤노코(辺野古) 이전에 적극 지원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협력과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 한국의 삼중(三中) 정책

아베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지 일 년이 되지만 양국의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극히 이례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양국 실무자들은 오히려 두 정상이 정상회담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색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급랭된 한일관계에서 새로 취임한 박대통령은 불안한 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 중시의 외교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박대통령은 취임 후 순방 순서를 과거 미국-일본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미국-중국으로 바꾸었다. 더욱이 아베 총리의 침략의 정의 발언이며 고노 및 무라야마 담화 계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박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계속 미루게 됨으로써 대일 외교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요인의 하나로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괴리에 있다. 한국은 일본의 역사인식이 퇴행적이라고 보고 일본은 한국이 과거사에 매몰되어 항상 반성 사죄만 요구한다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불화는 미국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정변에 따른 한반도의 불안으로 미국은 한일 관계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 때 한일 관계가 박대통령의 지나친 원칙론으로 생각하였지만

최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박대통령의 아베 총일 불신을 이해하고 아베총리를 비난하고대 한국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바라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 "적극적 평화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도 과거 역사의 전과(前過)를 인식하고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투명성과 정중한 설득을 동반한 "스마트 우경화"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방한,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티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티하는 것은 좋은 베티가 아니라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과 관계없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양다리 걸치기(double dipping)"라는 비난도 있지만 그 것은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2014년도에는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집중하여 "중국 중시, 일본 무시"라는 불필요한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외교는 좀 더 적극적으로 3개의 축으로 대외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즉 1)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2) 호주 캐나다등 중견국과 교류 협력을 통하여 중견국(middle power)외교를 강화하고 3) 중일의 갈등에 대해 중립을 지키면서 필요하다면 중재 역할을 하는 이른 바 "3중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 일본의 우경화와 중일 갈등

일본이 미국을 업고 우경화 행보를 본격화하는 데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라이벌 역사는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하는 명분으로 정명가도(征明假道)였다. 중국(明)을 정복하러 가니 길을 빌려 달라는 것이다. 일본은 전국시대부터 예수교를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를 통해 중국(明)이 전성기를 지나 쇠퇴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명분과 의리가 강한 조선은 일본이 중국으로 향하는 길목을 쉽게 내 주는 나라가 아니었다. 조선의 끈질긴 방어와 중국의 항왜원조(抗倭援朝)의 지원군으로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침략전쟁을 주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죽음으로 전쟁은 끝이 났다.

그 다음이 1894년 갑오년의 청일전쟁이었다. 신흥 일본은 당시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청의 북양함대를 격파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청은 일본에 패배함으로서 신해혁명을 통하여 왕조가 멸망하는 계기가 된다. 그 후 일본은 만주를 지배하고 중일 전쟁을 통해 중국의 대부분을 지배하였

다가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항복 한다.

개혁 개방에 성공한 중국은 2010년 GDP가 일본을 능가 세계 2위로 진입하고 해양굴기를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서방 학자들은 중국의 해군력 성장을 명(明)의 정화(鄭和)이후 “용(龍)의 재등장(Dragon swims again)” 으로 보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동중국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설정을 하여 이 지역 정세는 더욱 긴장되고 있다.

○ 신형대국관계와 중미

중국과 미국은 지난 해 6월 캘리포니아의 서니랜즈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신형대국관계를 논의하였다.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국 간의 세력전이의 수단으로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공동인식이 있었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rebalancing)정책이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가 아니며 중국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묵계로 보인다.

미국의 핵심이익으로 냉전시대에는 1) 서유럽 과 일본 2)터키 와 한국이었으나, 중동 오일 쇼크이후 핵심이익은 1)중동 산유국 2) 해상교통로(sea-lane)의 보호였다. 그러나 최근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 가스(shale gas) 혁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종래의 중동 산유국과 시 레인 보호보다는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핵심이익에서 덕(德)이나 독(毒)이냐의 논란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의식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서 중일의 충돌은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실효지배와 시정권(施政權)은 인정하여 미일안보조약을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 댜오위다오 갈등과 2014년 중일관계 전망

중국과 일본은 2011년 이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라는 “섬”의 영유권 문제로 전쟁도 불사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다. 악화일로에 있는 심각한 중일(中日) 갈등은 35년 전 양국의 평화우호조약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978년 8월 베이징에서 서명된 동 조약의 비준서는 중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일본을 방문한 덩샤오핑(鄧小平) 국가 부주석에 의해 교환되었다. 당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일본 총리는 문화대혁명을 마무리 하고 방일한 덩샤오핑을 극진히 영접하였다. 덩은 치바(千葉)의 신일철 제철소를 참관하고 신간선(新幹線)을 타고 교토(京都)등 유적지도 둘러보았다.

닉슨의 중국 방문에 따른 반소(反蘇) 미중(美中) 해빙무드에 자극받아 1972년 8월에 일본의 다나카(田中角榮) 총리가 중국을 극적으로 방문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은 국교를 회복하였다. 이후 두 나라는 평화우호관계의 국제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시대는 끝났고 중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을 추월하자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두 나라가 양보할 수 없는 "섬"이 표면에 떠오르면서 양국 관계에 태풍이라도 닥아 올 듯 거센 풍랑이 일면서 다시 갑오년을 맞이한 것이다.

아시아의 G2인 일본과 중국이 "섬" 문제 이외에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동북아의 한쪽에는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극도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피의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언제 다시 한반도에 불꽃을 튀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일이 서로 과거와 같은 평화 우호정신을 되 살려 동북아의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 이 "섬"이 날카로운 창(槍)처럼 중일 양국의 가슴을 찔러 치명적인 상처를 낼 뾰족탑(尖閣 pinnacle)의 섬이 될지, 한가롭게 낚시를 할 수 있는(釣魚 fishing) 평화 우호의 섬이 될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 중국과 일본은 "모든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라는 덩샤오핑과 후쿠다가 교환한 평화우호조약을 되 새겨 봐야한다.

갑오년 금년은 유달리 분쟁의 기운이 있는 해이다. 동북아에 있어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신냉전은 피해야 한다. 동북아의 나라들이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지만 정치 안보에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이른 바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해야 한다. 대화를 통한 협력만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

제4주제

미래사회와 상생협력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충남남부권역 정책포럼 초청 미래특강

미래사회변화와 상생협력

일시 : 2014.11.13(목) 17:00~18:00

장소 : 덕산 리솜호텔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박경식

강의 내용

1. 미래사회변화와 미래예측 중요성
2. 미래변화의 징후들
 - 사라지는 것과 탄생하는 것
3. 미래사회 메가 트렌드
4. 미래사회로 본 상생협력방안

Tommorow is built Today!

프로필(박경식)



010-2422-3633
expo306@naver.com

-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2012.07~현재)
 - 사단법인 미래사회연구원 이사장(2013.04~현재)
 - (주)DSR홀딩스 대표이사(2009.10~현재)
 - (사)유엔미래포럼 이사(2012.01~현재)
 - 국제미래학회 이사(홍보위원장)(현)
 - 유엔미래포럼(MP), 세계미래회의(WFS) 정회원
 - 국제공인 미래예측전문가 1호
 - (사)한국창업지도사협회 부회장(2010~2011)
 - (사)한국벤처창업학회 상임이사(2011.01~현재)
 - 국제가치평가사협회(IACVA) 정회원(2011.01~현재)
 - 지식경제부 기술혁신평가단 (외 10여개기관)평가 및 심사위원
 - 충남대,한남대, 대전보건대 외래교수(2012.08~현재)
 - 대전시민대학 미래예측 담당교수(2013.07~현재)
 - 삼성경제연구소 미래예측포럼 대표시삽 (SERI.org/forum/futuresofearth)
 - SERI 미래예측포럼 회장
- 번역서(공역); 유엔미래보고서2030 (유엔미래포럼지음, 2012, 교보문고발행)
유엔미래보고서2040 (유엔미래포럼지음, 2013, 교보문고발행)
글로벌트렌드 2030 (미국가정보위원회지음,2013, 유엔미래포럼)
- 저서(공저) : 전략적 미래예측방법론 바이블(2014.08, 국제미래학회)

2014-09-16

미래전략정책연구원

3

<강의 결론>

The Art of the Long View

-준비하지 않는 국가, 기업, 개인에게 미래란 없다!

-성공한 기업, 사람은 미래를 먼저 읽었다!

< 9.11테러를 예측했던 피터 슈워츠 >

-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4

1. 미래사회변화와 미래예측의 중요성

< 미래예측을 공부해야 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

결국,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

**즉, 국가,기업,개인에게 다가오는 미래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것…**

청·장년층 고민거리 1위는 '불확실한 미래'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10-13 12:00 | 최종수정 2013-10-13 15:23



대한은퇴자협회(이하은퇴협)는 지난 8월 6일부터 한 달간 10~30대 청년층과 40대 이상 장년층 975명을 대상으로 한 '청·장년 인식 설문조사' 결과 '현재 당면한 가장 힘든 점'으로 장년층 응답자의 36%(203명), 청년층 응답자의 36%(135명)가 '불확실한 미래'를 꼽았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퇴근하고 있는 직장인들 모습.<<연합뉴스 DB>>

청년층, 장년층 각각 36%가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

◆ 우울증에 빠진 서울! 원인은 불안한 미래!



■서울시 1만8천여명 조사...미혼>기혼, 여성>남성
평균점수: 33.07 (경증우울증)

■우울증 자가테스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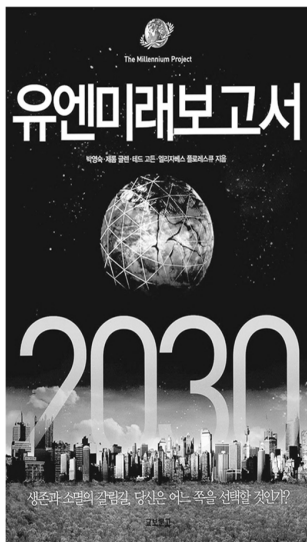
➢정상(0~20점), 경계 및 경증우울증(21~40점), 우울증 고위험군(41~60점)로 분류

■서울거주자는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경증우울증군에 속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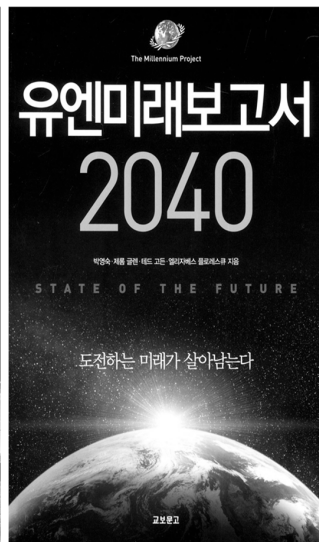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2013.10.21)

미래전략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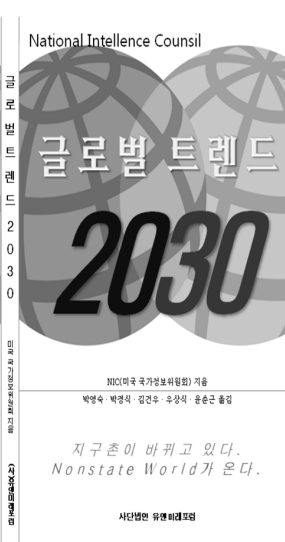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미래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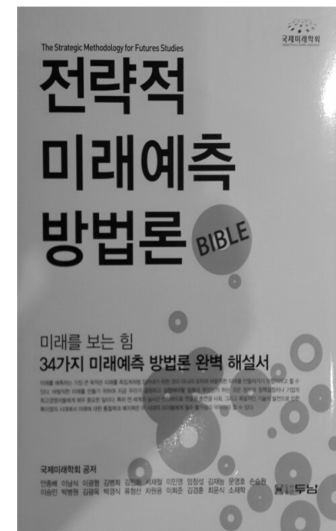
2012.12 교보문고 발행
제롬글렌,테드고든,박영숙외 공저
박경식의 번역



2013.12 교보문고 발행
제롬글렌,테드고든,박영숙외 공저
박경식의 번역



2013.7 (사)유엔미래포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지음 이남식,박경식의 공역
박영숙,박경식의 공역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박경식

❖부제: 생존과 소멸의 갈림길,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2012.12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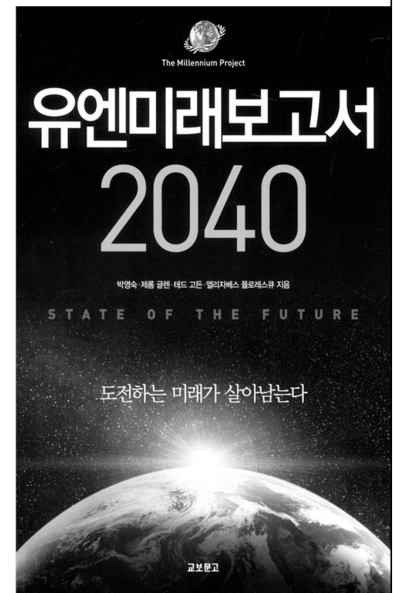
- 저자: 제롬 글렌, 테드 고든, 박영숙 외 공저
- 유엔미래포럼(MP)의 3천여명의 학자, 전문가 참여
- 10년후 미래를 예측하여 매년 유엔등에 보고
- 매년 개최되는 세계미래회의(WFS)에서 발표
- 보고서 원문: 6천여 페이지
-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
- 2030판은 3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
 - 경제붕괴 시나리오
 - 불로장생 시나리오
 - 우주개발 시나리오
- 책이 전하는 메시지: “가고자 하는 미래에 도전하라”

◆ 2030년을 지배할 3대 키워드(유엔미래보고서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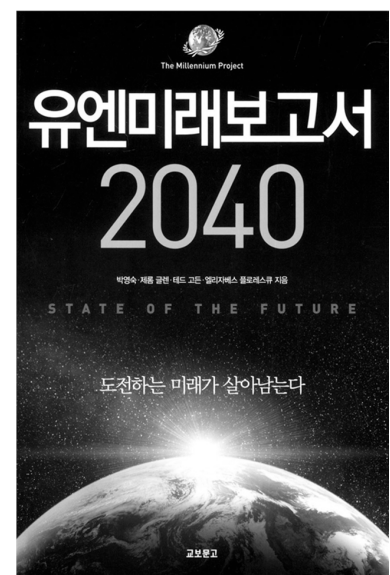
◆ 향후 10년을 지배할 키워드

1. 창조국가 : NBIC이 10년후 미국의 미래 먹거리
2. 모바일 커머스 : 2015년에 세계시장 규모 2,300조원
3. 소셜미디어 : 개인은 물론 사회 문화를 바꾼다
4. 미래예측기술 :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아는 힘
5. 기후변화 : 최대의 산업으로 발전할것
6. 로봇의 귀환
7. 개인 맞춤 의학
8. 빅데이터
9. 3D 프린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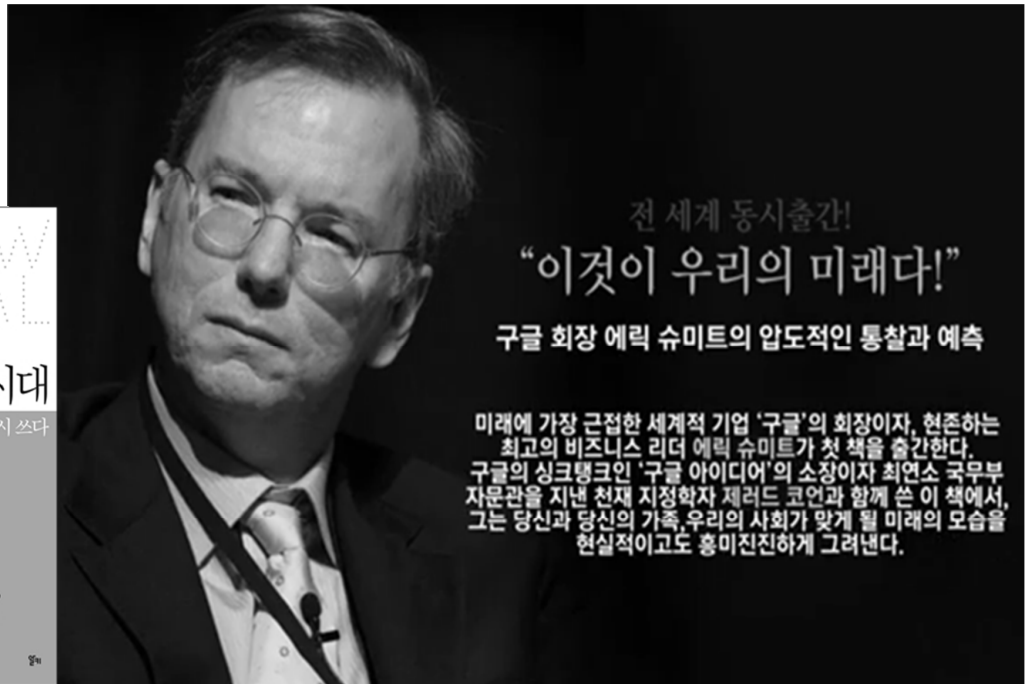
◆2020년 한국에서 추락하는 7가지

- 1.인구감소로 국가가 추락한다 (코리아 신드롬)
- 2.자동차의 추락과 그 대안
- 3.대규모 전력공급기업의 추락과 대체에너지 부상
4. 철강산업의 추락과 신소재의 부상:
- 5.제조업,유통산업의 추락과 3D프린터
- 6.대학교의 추락과 교육혁명
- 7.스마트폰의 추락과 사물인터넷의 부상



❖ 새로운 디지털시대 (에릭 슈미트와 공저, 2013.4.23 전세계 동시출간)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전 세계 동시출간!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의 압도적인 통찰과 예측

미래에 가장 근접한 세계적 기업 '구글'의 회장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 에릭 슈미트가 첫 책을 출간한다. 구글의 싱크탱크인 '구글 아이디어'의 소장이자 최연소 국무부 자문관을 지낸 천재 지정학자 제러드 코언과 함께 쓴 이 책에서, 그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 우리의 사회가 맞게 될 미래의 모습을 현실적이고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인터넷의 전파 속도(과거와 미래)

- 21세기 첫 10년간 연결된 세계인 숫자 : 3.5억명→20억명
- 휴대전화 가입자: 7.5억명→50억명이상
- 2025년에는 70억명 사용할것(80억 인구)
- 연결성(Connectivity)은 더욱 경제적,실용적으로 강화 예상
- 사회는 전체기술세대보다 더 빨리 도약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 커뮤니케이션 기술: (기술혁신+문화혁신)→우리의 제도를 크게 바꾸어 놓을것
- 정보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거의 많은 제도와 위계질서들은 부적절하고, 쓸모없게
- 가장 큰 영향: 국가와 기관의 권력을 재분배하고 개인에게 상당부분 이전할것.
- 미래는 전세계적인 연결성의 확대로 도전과제와 해결책을 모두 갖고 있다.
- 결론: 미래에 일어날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 “앨빈 토플러와 빌 할랄교수”의 경고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미래에 필요치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절뚝거리며 걷어가는 것과 같다.”

자료:세계미래포럼

◆미국정부 발표 : 10년후에는 현존직업의 80%가 사라지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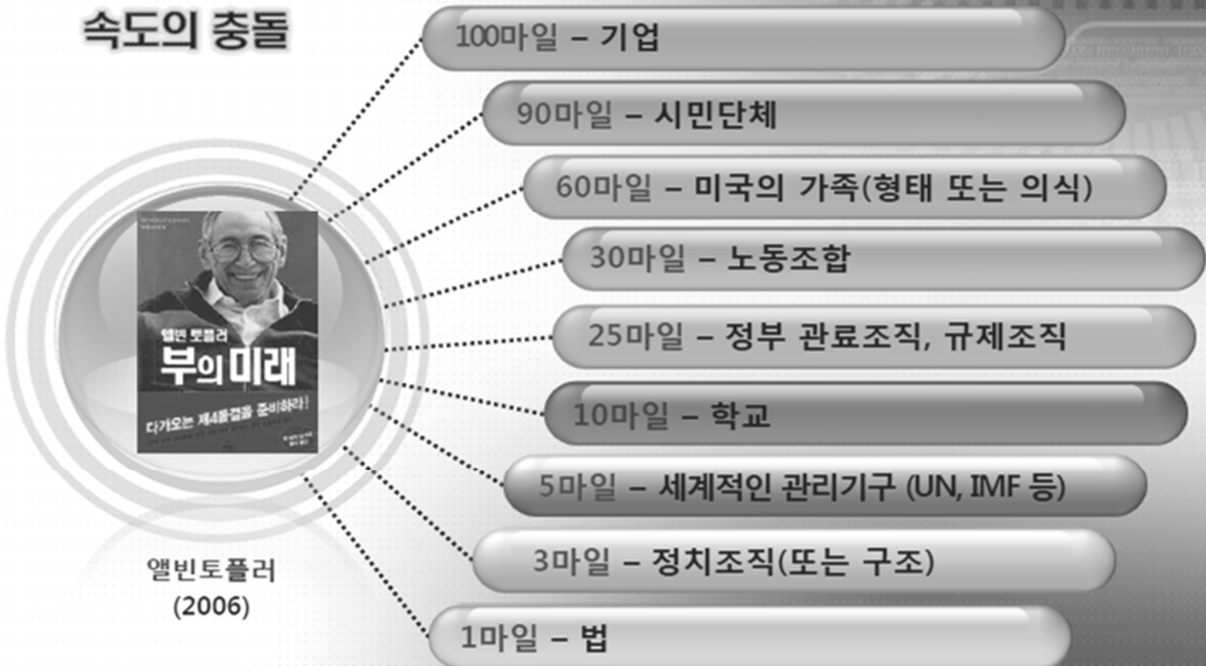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5

❖변화와 혁신의 속도차이

속도의 충돌



자료:세계미래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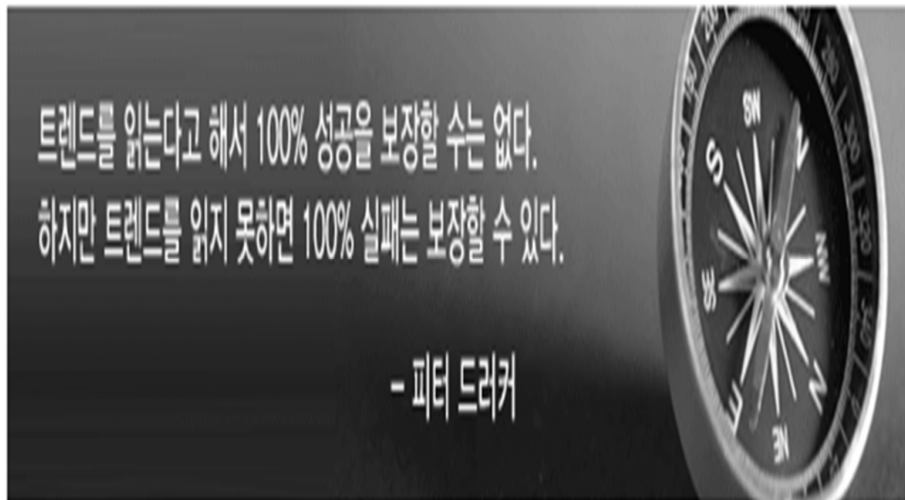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6

◆GLIN(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 세계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거가 말하는 트렌드의 중요성



- 결국 미래를 읽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 피터 드러거 -
- 사례 : 코닥, 노키아, 소니, GM……

■ 피터 드러거 :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아”

2014-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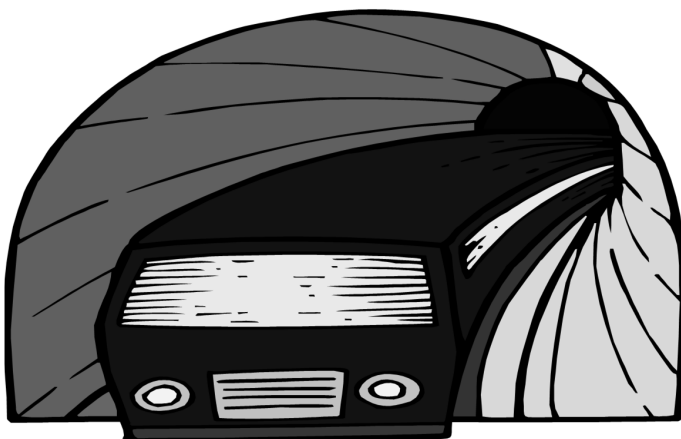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7

◆ 미래 생존 조건(개인,기업,국가)

The faster we go...
...the farther away we need to see

자동차 시속이 빠를수록 시야를 멀리 봐야하고,
시대변화가 빠를수록 멀리 내다봐야... <짐 데이토>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8

◆ 미래예측의 중요성

-구글의 CEO 래리 페이지-

➤ 회사들이 망하는 이유는, 미래를 보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틀렸다!

(Everything we know is wrong!)

-매그너스 린드비스트(스웨덴)-

< 변화를 읽지 못하는 7가지 사각지대 >



- 변화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너무 작고 사소해서, 너무 돌발적으로 일어나서,
- 모든 것이 오늘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사고방식
-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현재주의
- 울타리에 갇힌 근시안
- 실패를 두려워하는 비관주의
 -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 트렌드의 폭풍을 미리 인식하지 못한다.

< 칼 세이건의 우주달력 >

- 빅뱅이후 현재까지 150억년을 1년짜리 달력으로 표시
- 1개월(12.5억년), 1일(4천만년), 1초(500년)
- 인류 탄생: 12월 31일 밤 10시30분
- 로마제국의 멸망 : 12월31일 밤 11시 59분
- 15초전 : 문자 발명
- 10초전 :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
- 4초전 : 예수 탄생

- 시대의 변천사: 농경시대→산업시대→정보화시대→ (후기정보화시대)

- 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 → ???

- 의미: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변화에 적응해야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멀리 내다 봐야

2014-09-16

미래전략정책연구원

21

앞으로 20년간의 변화는 역사상 가장 크게 변화할 것!


-한국정부 초청으로 '13,'14년 방한-

구글이 선정한 세계제일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토마스 프레이
세계적 미래학자


구글이 정한 세계최고 미래학자, 미국 0.1% IQ 소유자클럽 회원

- 구글 선정 세계최고의 미래학자, '미래학의 아버지'라 불림
- 다빈치 연구소(DaVinci Institute) 소장
- '미래와의 대화'(Communicating with the Future) 저자
- 세계적인 미래학 저널지인 The Futurist 편집장



Why is this period so important?

- Humanity will change more in the next 20 years than in all of human history
- Risk factors will increase exponentially



Not Linear But Exponential

미래 변화 : 산술급수 → 기하급수로

22

◆오늘날 인류는 놀라울 정도의 정보를 우리는 매일 만들고 있다.

➤1분마다 접하는 지식이나 정보량

- 구글 검색: 2백만개
- 이메일 전송: 2억 5백만개
- 홈페이지 개설: 900개
- 페이스북 "좋아요" 등록 : 250만개
- 아마존 : 10만 2천불 구매
- 페이스북 : 15만 2천개 새로운 사진
- 유튜브 : 340만개 동영상
- 트위터 : 20만개 새글



2. 미래변화의 징후

< 미래예측을 공부해야 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

결국,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

즉, 국가,기업,개인에게 다가오는 미래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것…

미래변화의 징후

“ 지구촌의 21세기는
향후 10여 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

“ 현재의 국제경제
질서와 시스템은
2025년이면 거의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해 있을 것이다. ”

“ 기후변화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0년 이내에 매년
1,500억~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자료: NIC 글로벌트렌드(2008)
LG Business Insight(2009)

◆30만이 목맨다... 考試만큼 어려운 三星고시·現車고시 [경쟁률 기본이 100대1... 대기업 취업시험 열풍]

응시자 많아 문제내는 회사도 골머리, 기업당 교재 2~3권... 수험서 200종
인터넷 강의·특강 등 시장 급팽창... 일부 대학 취업 관련 강의까지 개설
'2011년 6만명, 2012년 8만명, 2013년 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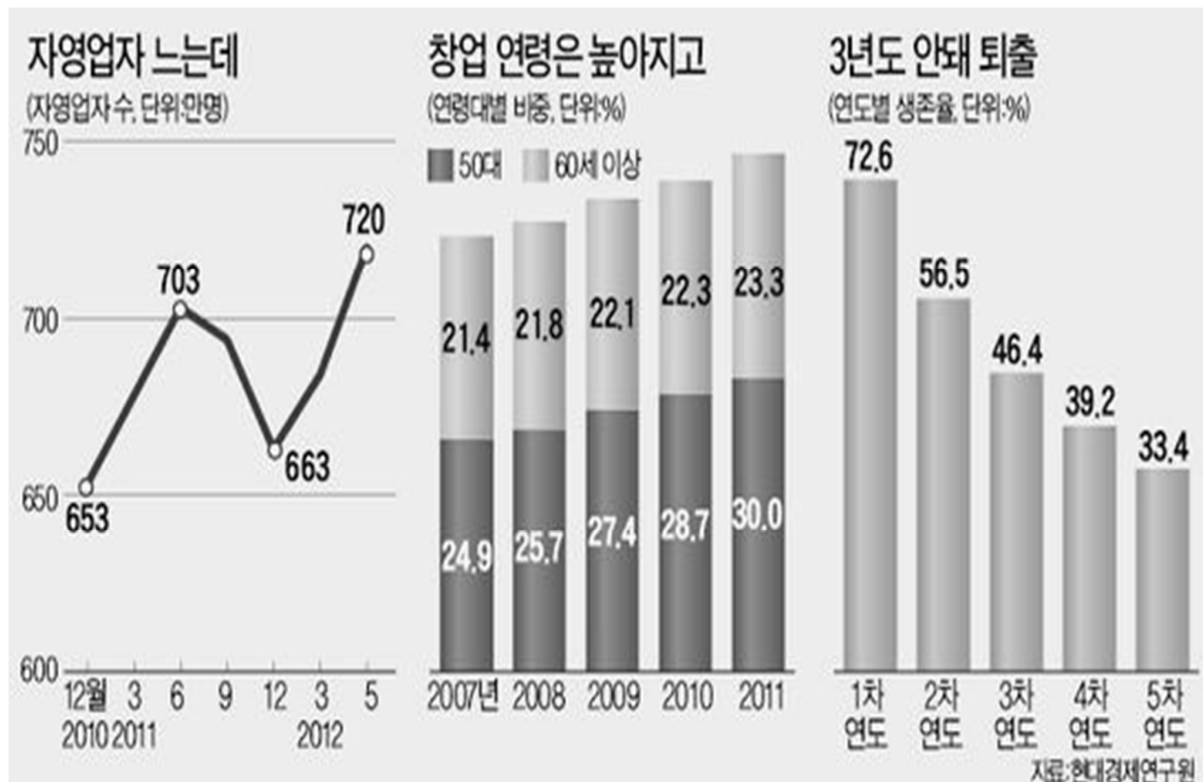
✓국내 10대 대기업의 평균 근속년수는 9.8년

◆ 구직전쟁에 나선 시니어들



미래전략정책연구원

◆ 창업전쟁 , 3년만에 절반이 문닫고, 5년후에 30%만 남아...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것들과 탄생할 것들>


이미 사라진것	미래에 사라질것	미래에 탄생할것
버스차장 타자수 속기사 전화교환원 지게꾼 음악다방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택배 대리운전 자동차보험회사	3D 프린터방 전기차 무인자동차 구글안경 드론(무인 비행 로봇) 우주엘리베이터
영업수 잡쌀떡 장수 연탄집 쌀집, 방앗간 대장간 25분 연상소 양장점과 양복집 뽕튀기아저씨 학교종	운전면허증 운전면허학원 자동차학원 옷가게 신발가게 의사, 변호사, 약사 정치인, 국회의원 스마트폰(?)	수많은 새로운 직업들

◆ 앞으로 20년간의 변화는 역사상 가장 크게 변화할것!

토마스 프레이
세계적 미래학자


구글이 정한 세계최고 미래학자, 미국 0.1% IQ 소유자클럽 회원

- 구글 선정 세계최고의 미래학자, '미래학의 아버지'라 불림
- 다빈치 연구소(DaVinci Institute) 소장
- '미래와의 대화'(Communicating with the Future) 저자
- 세계적인 미래학 저널지인 The Futurist 편집장



Why is this period so important?

- Humanity will change more in the next 20 years than in all of human history
- Risk factors will increase exponentially



Not Linear But Exponential

Over 2 billion jobs
will disappear by
2030

McKinsey & Company Report

“For every job
eliminated by the
Internet, 2.6 new
jobs are created”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31

의사도 결국은 빅데이터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미래! 대학의 운명은?

Powerful Advice



“Big data will
replace 80% of
all doctors”

- Vinod Khosla,
Co-founder of Sun
Microsystems and VC
at Kleiner Perkins

Prediction



“By 2030 half of
all traditional
colleges will
disapp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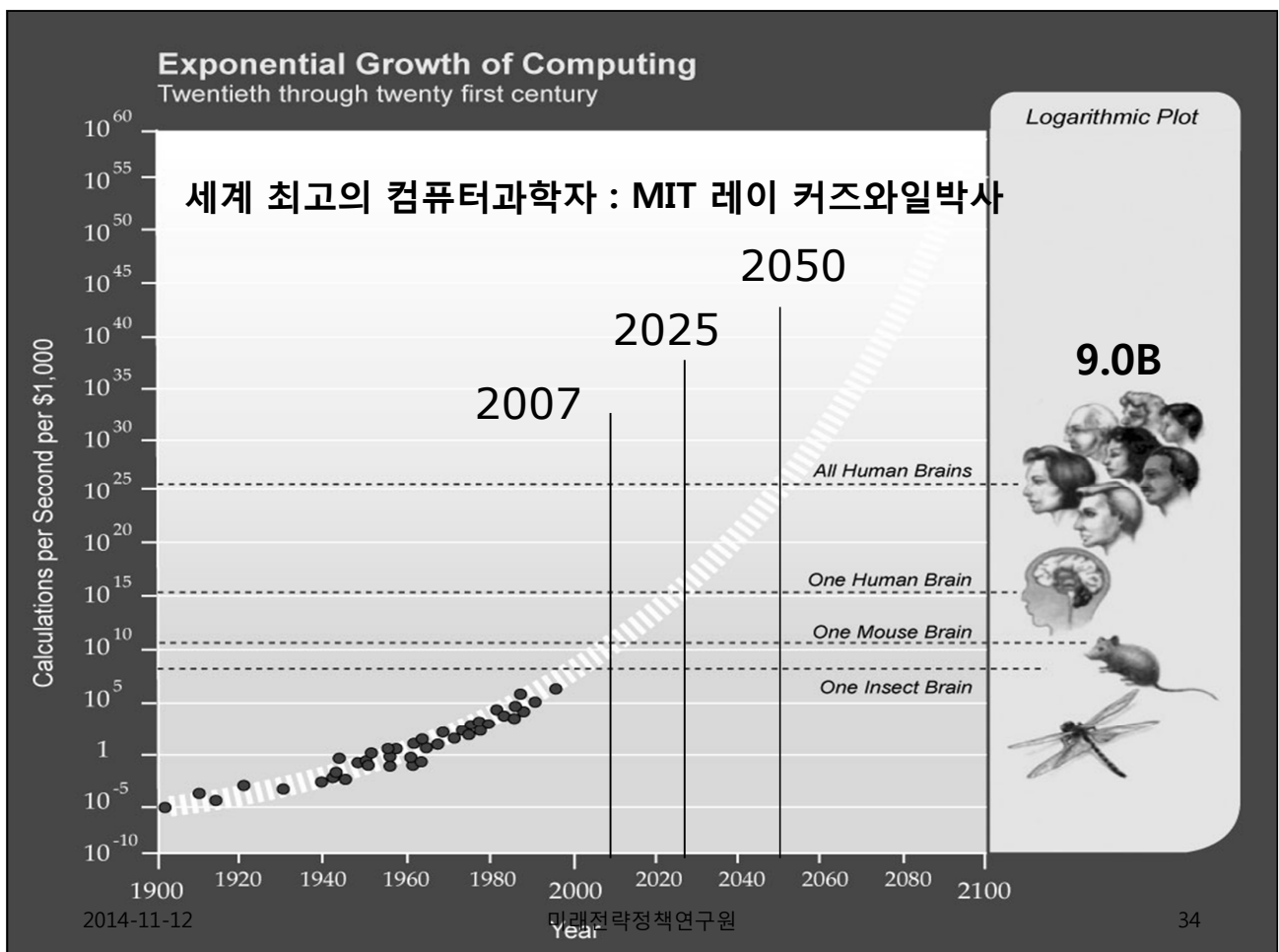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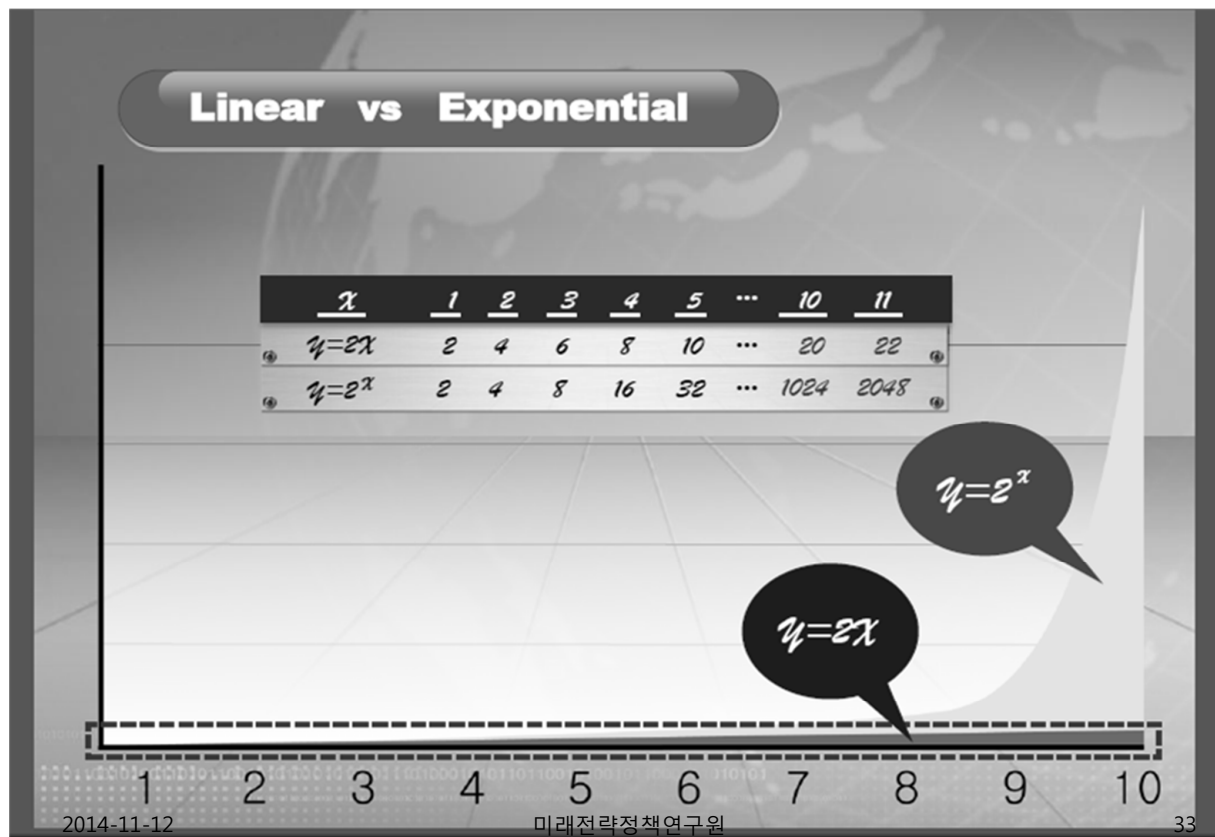
- Futurist Thomas Frey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32

❖ 그 원인은 미래과학기술 발전에 가속도가 붙어.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10조원 시대..

- '13년 3분기 실적 역대 최고 -

3분기 실적 :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10조원



- IM 사업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 6.3조원
- **IM 사업부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60%를 넘어.**
- 삼성전자 3분기 8500만대 스마트폰 선적

2014-11-12

35

삼성전자 구조조정 박차, 무선사업부 먼저 수술(2014.10.1, 조선비즈) 강동철 기자

■[독자 OS 개발 인력, 家電으로... 유럽선 노트북 판매 중단]

- 전자 관련 계열사 전기·테크윈, 경영진단 받고 생산 공장 폐쇄
- 연말 희망퇴직說까지 나돌아... 임원 인사철엔 태풍 몰아칠 듯



■삼성전기는 7월부터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주도하는 경영진단을 받는중.

■서강대 정옥현 교수(전자공학)

"위기에 직면한 삼성전자는 조직을 슬림화하고, 다변화된 제품군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삼성과 현대차가 무너지면, 코리아도 함께 무너질수도(?)

	전체	전체-삼성&현대차
2011년	3.7%	3.1%
2012년	2%	0.2%
2013년 3분기	2.4%	-0.2%

-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및 영업이익 급증이 실질GDP 기여도 증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3년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조원 가까운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
-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으로 이미 한국경제는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것.



3.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 미래예측을 공부해야 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

결국,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

**즉, 국가,기업,개인에게 다가오는 미래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것…**

❖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유엔미래포럼)

Ageing(저출산 ,고령화) / Asia

Bio Revolution(바이오 혁명,수명연장 NBIC)

Climate Change(기후변화)→ “미래최대의 산업”

Digital life(디지털 세상)

Education Revolution(무료, 온라인교육, 평생교육)

Female(여성성 강화→신모계사회 도래)

Globalization(글로벌화, 국제화,세계정부,세계단일통화)

Health welfare(복지제도 변화)

Internet R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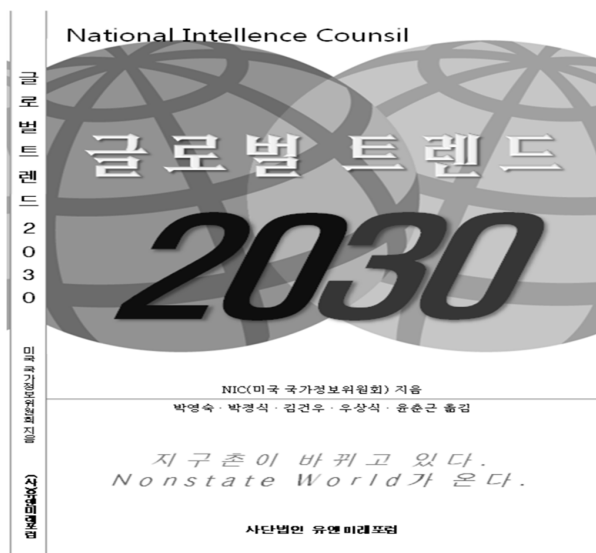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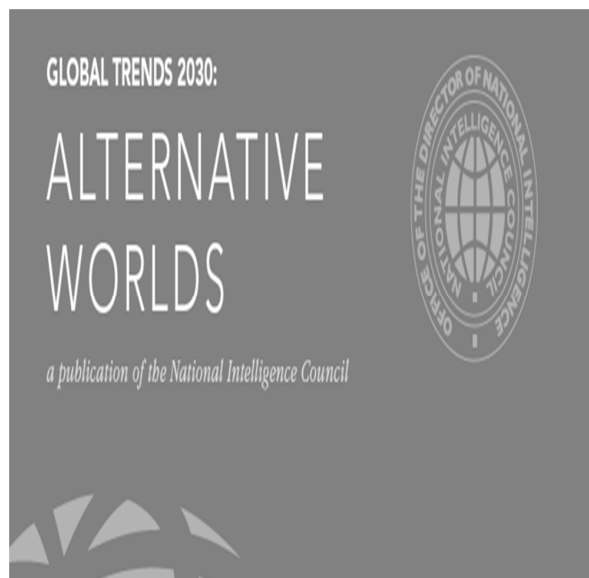
Jobless(일자리소멸, 1인기업,1인회사,협동조합)

→→새로운 시장 ,산업이 등장하면서, 부의 기회가 나타날것.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39



(2012.12월 공개)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작성 보고후 공개
- 매 4년마다 대통령 선거해에 장기 미래예측 작성→ 대통령 보고
- CIA,NSA등 미국 16개 정보기관 수장 국가정보장(DNI) 자문
- 1천여명의 미래학자,전문가등이 참여하여 작성

◆NIC 가 발표한 4대 메가트렌드(2012)

Four overarching megatrends will shape the world in 2030:

- Individual Empowerment. 개인의 권력 강화
- The Diffusion of Power. 권력의 분산
- Demographic Patterns. 인구생태학적인 변화
- The Growing Nexus among Food, Water, and Energy in
combination with climate change. 기후변화=>식량,물,에너지



MEGATREND 4 GROWING FOOD, WATER, AND ENERGY NEXUS

- 1.세계인구와 중산층 증가 → 식량, 물, 에너지 수요가 각 35%,40%,45% 증가 예상
- 2.기후변화에 대처 못하면 전망은 어둡다.
- 3.미국은 에너지 독립 가능성(셰일가스 수압파쇄기술 개발로)→원유가 폭락 가능성(?)
- 다만 셰일가스는 환경오염, 물부족, 지진에 크게 영향 가능성 상존
- 4.세계인구 절반이 심각한 물부족 겪을 수도 있다.(중국, 인도 포함)
- 5.결국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따라 식량, 물, 에너지 상관관계가 크게 증가할것
인구변화: 70억(2012)→80억(2025)→90억(2050)

향후 세계 바뀌놓을 5대 메가트렌드

글로벌컨설팅기업 '매킨지' 도미닉 바튼 회장, 국내 포럼서 강연



(2013년 WEF에서)

1. 리밸런싱(Rebalancing)→신중산층,신흥세계 등장
2. 인구 고령화
3. 기술(technology) 변화→스마트폰, 데이터생산
4. 자원의 희소성 (물부족,에너지,환경...)
5. 국가와 정부의 변화→ 권력 약화...

- 4년간 전세계 2,500명의 글로벌 CEO 면담 결과,
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 기술의 변화와 미래산업 트렌드

43

Network Society Developments: Staggered Closing of Global Divides

- ◆Digital divide(디지털 디바이드) 2017년소멸
- ◆Education divide (교육 디바이드) 2020 소멸
- ◆Income divide (소득 디바이드) 2030 소멸
- ◆Power divide (권력 디바이드) 가장 오래 존속

자료: World Bank, 2005

◆ 2014년 가장 화두가 된 미래변화 암시 사례

1. 3D 프린터 → 미래 제조업의 혁명을 암시
2. MOOC → 미래 교육혁명을 암시
3. 사물인터넷 → 미래 금융산업 변화를 암시
4. 드론(무인항공기)

45

Barack Obama



지난 2월 미국의 Barack Obama 대통령은 연두 의회 연설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산업과 기술부문의 혁신을 견인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언급 (Inc, 2013. 2. 14)

“이제 제조업의 혁명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지닌 3D프린팅 기술을 모든 근로자가 습득해야 한다.”

“고성능 3D 프린터, 2016년이면 PC보다 싸진다”
-Gartner (2013.03.29)

“3D 프린터, 더 이상 소비자 제품 아니다”
-Gartner (2013.4.9)

◆ 3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은 3D프린터!(이코노미스트)



1st Industrial Revol.

2nd Industrial Revol.

3rd Industrial Revol.

증기 기관차

컨베이어 시스템

3D 프린터

▲ 1 1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증기기관차, 2생산 표준화·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한 2차 산업혁명, 3 3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인 3D프린터로 만든 시제품을 꺼내는 모습.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47

◆ 3D프린터가 만들어 갈 미래세계

- 생산 시스템의 변혁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 일반 제조업의 추락
- 많은 산업의 추락 (택배, 물류, 포장,)
- 일자리 감소(대량생산 기업의 쇠퇴로)
- 1인 기업의 부상
- 1인 제조업의 등장
- NBIC 융합산업 발달→ 선진국 제조업의 발달
- 쓰레기 감소→자원 절약→지구온난화 예방→ 인류의 지속가능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48

미래 교육혁명이 다가온다!

5무 시대 ➡ 무학교(No School)
무학년(No Grade)
무교사(No Teacher)
무학위(No Degree)
무학비(No 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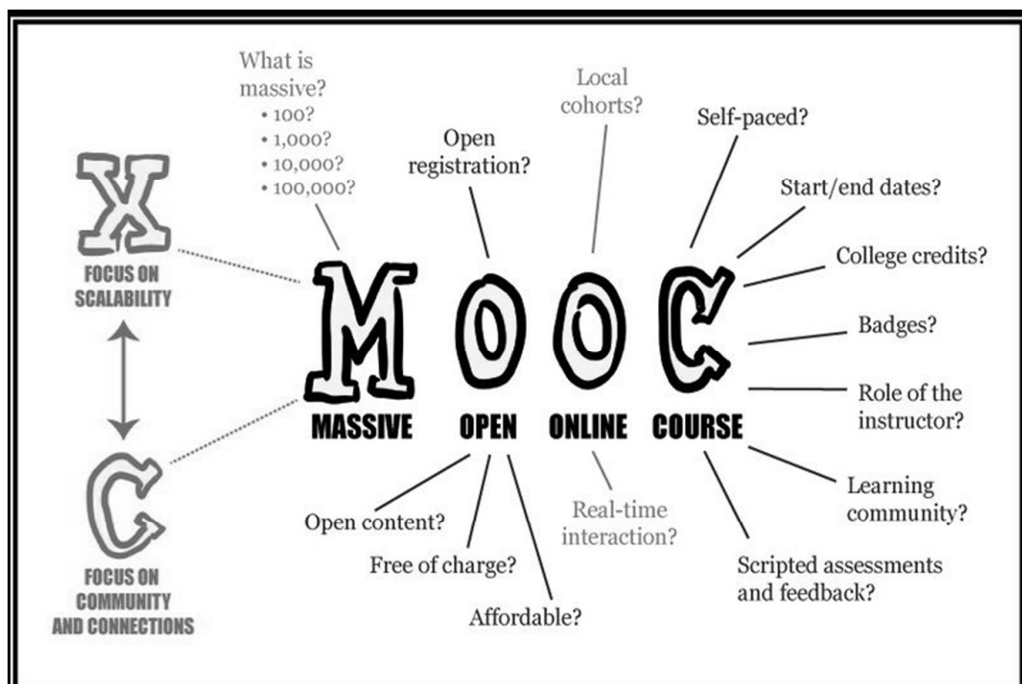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49

◆ '12년 시작된 교육혁명 (대중 공개 온라인 무료교육)

➔ “미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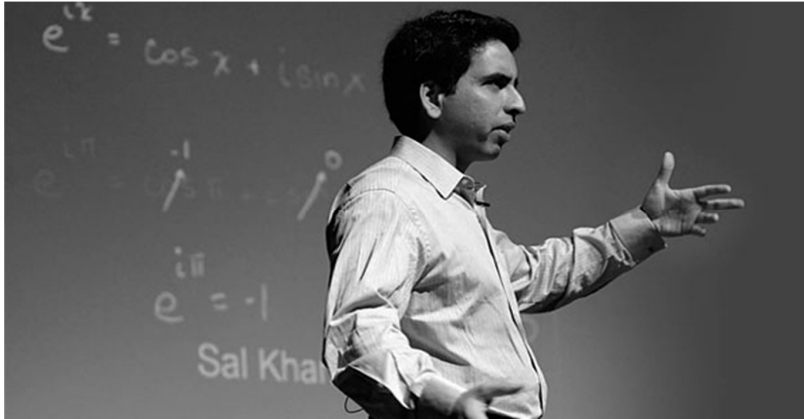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50

MOOC 원조 : 살만 칸 아카데미(Khan Academy)

"기초부터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배울 수 있고 피드백과 평가를 받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MOOC 강사인 살만 칸.
'칸 아카데미'의 수강생 수는 **132만명**에 이른다.
- ◆ 카이스트 학생들 : 초크아카데미(www.chalkacademy.org)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미래변화의 원인, 왜 ? 그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

➤인구변화 → 니즈변화 → 시장변화 → 관련 산업변화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

➤기술의 혁명 → 니즈 → 시장 → 산업탄생(애플의 스마트 폰)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지속등장 (부채와 선풍기 사례)

➤3D프린터, 나노바이오융합, 사물인터넷, 로봇기술의 등장

◆세대의 변화

➤관념의 변화(미래세대는 소유 아닌 접속&공유, 이동성강화, 글로벌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지구전체 공통의 문제 해결 중요

➤지구온난화→이상기후→해수면상승→제해증가→(물부족) →식량부족

◆SNS

➤Y세대- 직접 참여, 직접투표원해 (직접민주주의 시대의 도래)

➤24시간 언제,어디서나 접속 및 검색, 네트워킹이 가능때문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52

◆ 소멸하는 일자리

- 텍스타일, 섬유산업, 제조업 중 봉제, 구두제조업, 옷 가게 등
- 아동산업: 아동 숫자 감소 (저출산 요인)
- 중간 간부: (직접 수평 접속, 사장이 직접 담당사원과 소셜미디어로 접속)
- 세일즈맨
- 제조업 대부분: 대신 서비스업, 기후변화&에너지산업
- 결혼, 혼인 등 다양한 행사 감소
- 쉬핑, 패킹 등 배달 운송인력, 택배인력 감소
- 미국(교육부,노동부)은 10년후에는 현존 직업의 80%가 사라질것.....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53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

- 현존 직업의 절반이상이 2030년 이전에 사라진다
- 사라지는 원인은 인터넷,로봇,3D프린터등 때문.
- 10년뒤 부상하는 직업의 60%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좋은 시절 다 갔다"...금융권 '시련의 계절'

"1년 사이 사라진 금융권 일자리가 5만 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직장·직업뉴스

- 삼성그룹 구조조정 본격 시작(2014.9)
- 현대중공업 임원 300명 일괄 사표 제출(2014.10)

◆최근 언론에 나타난 기사들

2014. 7. 22 (화)

SMART CLOUD SHOW 2014

Knowledge in MOOC를 들어보. 스마트클라우드쇼

ChosunBiz

수도권 출퇴근 대란

policy/finance

policy/

뉴스

마켓

부동산

자동차

Weekly Biz

오피니언

WeeklyBiz ▾

[Weekly BIZ] "현재 직업의 절반은 20년 안에 사라질 것" 직업별 컴퓨터 대체 가능성 조사

오윤희 기자 ▾

기사

100자평(0)

↓

✉

🔒

+ 크게

작게

Book

입력 : 2014.07.19 03:04

급속한 기계화... 텔레마케터·회계사 가장 큰 타격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 높은 직업들

뉴스

마켓

부동산

자동차

Weekly Biz

오피니언

WeeklyBiz >

[Weekly BIZ] 부장·과장 없는 세상이 온다

런던-오윤희 기자 >

기사

100자평(2)

📄 📧 📱 + 크게 | - 작게

입력 : 2014.07.19 03:04 | 수정 : 2014.07.21 09:21

Cover Story '일의 미래' 저자 그레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미래는 '80년 노동시대' 이제 평생 직업은 없다

IT 발달로 조직원들 직접 소통 가능...지시 전달하는 중간관리직 사라져

전략·노하우 필요한 직군과 청소 등 단순직만 남아 양극화

제너럴리스트보다 匠人형이 유리...새 기술 습득해 계속 변신은 해야

①기술의 급속한 발전-"중간관리자가 사라질 것"

②고령화: 80년 노동 시대

③세계화: 당신의 취업 경쟁자는 전 세계인이다.

④일과 삶의 균형: 영원한 숙제

2014-07-24

미래전략정책연구원

5



미래전략개발원

58

“현재 우리나라 직업종류의 숫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별 직업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본직업	관련직업	유사명칭	합계
1 관리자	158	148	56	36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64	1562	663	3789
3 사무 종사자	482	259	118	859
4 서비스 종사자	126	83	101	310
5 판매 종사자	110	70	53	233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7	141	36	274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0	479	402	1591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10	1125	876	4011
9 단순노무 종사자	123	46	52	221
A 군인	5	0	0	5
합계	5385	3913	2357	11655

미래전략정책연구원

로봇에게 일자리를 내어주는 아홉 가지 직업

출처 : 유엔미래포럼 2011.3.30

- 약사
- 변호사와 변호사 보조원
- 운전기사
- 우주비행사
- 계산원
- 군인
- 아기 돌보미
- 구조원
- 스포츠기자와 리포터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0년 후 일자리 60%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

미래부상하는 일자리 55가지(토마스 프레이)



❖ 2030 5대 대표산업 전망(토머스 프레이)

(2012.3월 이스탄불 TEDx 미래특강)

- 203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 20억개가 사라지고,
- 지구인 80억명중 절반은 일자리 없어질것

- (1) **에너지 산업의 판을 새로 짠다**→전력산업 구조변화, 미래 가장 많은 일자리 제공
- (2) **차장 다음으로 기사가 사라진다**→무인자동차,전기차,소형비행기
(사라지는 직업: 운전기사, 주유소, 주차관리원, 교통경찰, 택배, 집배원등)
- (3) **대학교수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오픈코스 웨어로 인해, 모든 교육은 무상 제공
(소멸일자리:교수,교사,트레이너, 새로운 일자리: 코치,디자이너,개발자, 운영자등)
- (4) **제조업이 사무실과 가정으로 들어온다**→3D프린터 본격 보급되면 소멸산업은 의류제조,신발제조,소매업체,건설업,일반제조업체, 임플란트.....)
- (5)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 거의 모든 물리적 작업은 로봇으로 대체
부상 직종은 로봇 디자이너, 엔지니어,수리전문가,트레이너등)

<결 론>

■ 향후 10년간 미래예측은

➤ 먼저 미래사회변화와 미래 메가트렌드를 알아야!

1. 기후에너지 관련 산업(기후, 물, 식량, 에너지, 탄소, 환경)
2. 건강. 의료.보건.복지 산업
3. 시니어관련 산업
4. 교육관련 산업(사이버.온라인 교육/ 평생교육)
5. 3D 프린팅 관련산업
6. 클라우드 컴퓨팅
7. 사물인터넷(IoT)
8. 지능형자동차

●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

-피터 드러거-

2014-11-12

미래전략정책연구원

63

4. 미래사회로 본 갈등관리와 상생협력방안

< 미래예측을 공부해야 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

결국,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

**즉, 국가,기업,개인에게 다가오는 미래변화의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것…**

◆향후의 갈등 요인

1. 일자리 부족
2. 현존 직업의 소멸
3. 저출산.고령화의 지속
4. 지역경제 활성화 부진
5. 지역간 불균형

상생협력과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

1. 일자리 창출 : 미래부상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2. 지역경제발전 : 미래부상하는 산업으로 집중과 관련 교육 강화
3.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교육강화로 지구사랑 운동 전개
4.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비: 출산율 향상과 인구 유입 정책
5. 향후 경제위기시 갈등에 대한 사전 대비
6. 계층간,지역간 네트워크 강화로 상생협력과 갈등 사전 대비

인불원려 난성업(人不遠慮 難成業)

“사람이 멀리보지 아니하면, 결코
사업이나 학문을 이루기 어렵다!”

2014-05-21

미래전략정책연구원

67

Q&A

강의를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충남남부권역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정책
포럼의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장 박경식

제5주제

국방대학원과 충남 남부권역 4개 시군 상생협력 방안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 회장)

2014. 11. 14(금), 09:00
충남 남부권 갈등관리포럼

국방대학교와 충남 남부권 시군간 상생 · 협력방안



최 병 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갈등관리학회장, 충남대 겸임정교수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Plus Chungnam Policy Forum

 한국갈등관리학회
Korean Society for Conflict Management

목 차

☐ 국방대학교 충남 논산이전 개요

☐ 해외 국방/군사도시 벤치마킹

☐ 국방대~시.군간 상생 · 협력방안

국방대학교 충남 논산이전 개요



3

□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의 당위성

- 국방대학교 논산입지는 국가정책 방향 · 목표상의 최적 입지
- 계백장군의 얼과 황산벌 전투정신이 살아 숨쉬는 구국의 성지
- 계룡대, 자운대, 대덕R&D특구 인접 국방클러스터 구축 전망
-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목표와 가장 부합
- 행정도시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 지역균형발전 촉진
- 국방대 입지의 양호한 접근성 및 우수한 입지조건 보유
- 논산지역은 개별이전 공공기관 입지 원칙에 부합지역
- 논산, 호남,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 인접
- 계룡대~자운대를 잇는 국방벨트 구축의 거점지역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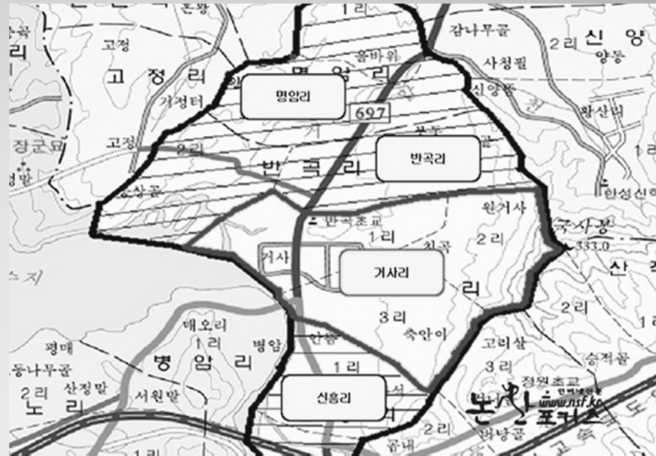


4

□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유치지역



▼ 국방대학교 이전지 양촌면 거사리 사업지구



5

□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승인 개요

❖ 근 거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항

❖ 사업기간 : 2010~2016년

※ 2013. 10. 29 : 국방대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

❖ 위 치 :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

❖ 이전규모 : 부지 697,207㎡, 시설 145,378㎡

❖ 이전인원 : 3,392명(교직원 518, 학생 2,874)

❖ 주거시설 : 1,092호(관사 3, 아파트 496, 독신숙소 593)

❖ 총 사업비 : 3,444억원

❖ 주요시설 : 교육, 업무, 주거, 체육, 종교시설 등



6

□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추진내역 및 기대효과

◆ 추진계획

- 2014. 1 : 국방대학교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
- 2014. 1 ~ 10월 : 국방대 이전사업 실시설계(주대표사 : 계룡건설)
- 2014. 4 ~ 9월 : 각종 인·허가 협의
- 2014. 10 : 국방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 2016. 12 : 공사준공 및 이전준비



◆ 기대효과

⇒ 인구유입 및 세수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국방 중심도시 역할로 국가안보의 중심지역으로 부각

7

□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주요시설 승인내역

- ① 학교본부
- ② 안전보장대학원
- ③ 국방관리대학원
- ④ 합동참모대학
- ⑤ 직무연수부
- ⑥ 안보문제연구소
- ⑦ 리더십개발원
- ⑧ 도서관
- ⑨ 역사관, 강당



- ⑩ 복지시설
- ⑪ 실내체육관
- ⑫ 무궁화회관
- ⑬ 근무지원시설
- ⑭ 종교, 주거시설
- ⑮ 문화, 체육, 훈련장 시설

8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사업 추진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 보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1월 공사착공 등 국방대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4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도의회, 논산시 의회 의원과 본청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대학교와 공동으로 국방대이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오는 11월 공사착공을 앞두고 원활한 국방대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산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명회에서는 국방대학교 홍보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방대이전사업 개요, 건축계획, 시설 배치계획 등 국방대이전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국방대 이전 공금증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논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대 이전지 보상 및 도시계획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주단지 분할가 등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오는 11월 공사가 본격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논산시에서는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국방대 이전지 부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매년 봄철으로 농작물 피해가 잦은 국방대 이전지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국방대는 오는 2017년 개교 목표로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대 697,207㎡ 부지에 교목시설 등 총 145,37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11월 공사가 착공되면 논산시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 국방대 논산이전사업 탄력 받는다

국방대 이전 사업설명회 개최 오는 11월 착공 예정

[충청씨티신문, 2014. 9. 25]



9

8 NONGSAN

시정소식

논산시지선문

국방대 시공사 선정 논산 새시대 '청사진' 나왔다

국방대 이전 위한 시공사 선정 완료 토지 보상율도 77% 완료



국방대 조감도(안)

지난 2007년부터 6년 동안 진통을 겪었던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10일 2601억원 규모의 국방대 이전 사업의 주 시공사로 계통건설을 대표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코, 유진건설, 해우종합건설, 고덕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경쟁 입찰을 통해 확정됐다. 이는 국방대 논산이전이 확정된 지 5년 364일 만에 이룬 결실이다.

시공사 선정은 오는 2016년까지 이전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대의 일정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올해 10월 실시 설계 완료와 함께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국방대 이전에 앞서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양촌면 거사리 일대에 진행중인 국방대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오는 2014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도로 개설은 단순히 도로 하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관 전기 통신 등 도시의 체계한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오면서 논산 양촌면 일대는 말 그대로 삼전벽해(桑田晝變)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국방대 논산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3200

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논산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게 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국방대학교 교장이 이장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정에

국방대 논산 이전 "시민의 단결된 힘"이 맺은 결실 총 3444억원 투입 오는 2015년 완공 목표 순조 국방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지난해 이미 착수해

고급 간부 양성의 새 보금자리로 충남 논산을 지목하면서 부터다.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병 육성 요람인 논산 육군훈련소와 육군의 심장 역할을 담당하는 3군 사령부가 위치한 논산이니 만큼 국방대 논산 이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국방대 논산 이전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2007년 국방대 논산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전 사업을 총드는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국방대 교직원들이 논산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3만 논산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논산시는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앞 향의

시위를 시작으로 2만 4000여명 시민의 국방대 논산이전의 열원을 담은 서명서 전달 등 13만 시민이 하나의 공동 목표 달성에 일치단결하는 자력을 보여줬다.

삼사의 마무리되지 않던 국방대 논산 이전 문제는 2010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2010년에는 총 사업비 2740억원에 51만 5465㎡(구 단위 15만 6천 평) 규모에서 이듬해인 2011년에는 면적이 32%

늘어난 69만 7207㎡(구 단위 21만 1천 평)으로 판이 커졌고 예산 역시 25.6%가 늘어난 3444억 원(공사비 2601억, 토지 보상비 843억)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런 결실은 곧 길이 국회의 청와대 국방부의 문턱이 닳도록 뛰어 다닌 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열원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부 예산안이 확정되자 논산시는 국방대 이전을 양촌면 거사리 일대에 보상계획 열람과 공고 및 이의신청을 받는 등 국가 기반 산업 유치의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논산으로 이전을 결정하고도 이전의 기반이 되는 국비 확정을 자립필립 미루면

10

□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논산시)



- ① 국방대 이전 기관간 협조 및 행정지원 총괄 관련 사항
- ① 국방클러스터(국방산업단지) 관련 사항 추진 관련 사항
- ① 국방대 관련 도시기본계획 관련 협의 지원 관련 사항
- ① 국방대 이전 기반시설지원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 ① 국방대 관련 기반시설 및 도로망 구축등 주민편익시설 설치관련사항
- ① 국방대 관련 수용지역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 관련사항
- ① 국방대 관련 이주민 생활대책 수립 관련 사항
- ① 국방대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도단속 관련 사항

11

□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① 행정지원분야

- 국방대 이전 기관간 협조 및 행정지원 총괄
- 국방대 이전 관련 미래전략산업 추진 사항
- 국방 클러스터(국방산업단지) 관련 추진 사항
- 국방대 이전 지원 관련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국방대 이전 관련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
- 국방대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 기반구축 및 협력활동 사항
- 국방대 이전 관련 홍보 사항
- 기타 국방대 이전 관련 행정적 지원 사항
- 그밖에 사업단 및 과내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시설지원분야

- 국방대 이전 시설 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방대 관련 도시기본계획 관련 협의지원 사항
- 국방대 관련 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 지원 사항
- 국방대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지원 사항
- 국방대 관련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 등 지원 사항
- 기타 국방대 관련 시설 지원 사항

12

□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 기반시설분야

- 국방대 이전기반 시설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반시설 및 도로망 구축 등 주민편익 시설 설치
- 입지주변 환경정비 및 지역개발
- 기반시설관련 용역사업관리
- 기반시설 공사·지도·감독
- 기타 기반시설관련 사항 등
- 그밖에 과내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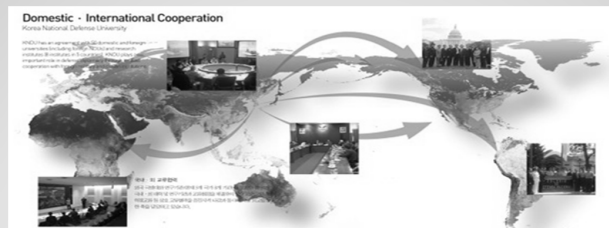
㉡ 이주보상지원분야

- 수용지역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
- 이주대상지 조사 및 자료작성
- 이주대상 주민 고충상담
- 지장물 이설에 관한 사항
-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 주민 집단이주 관련 각종 민원처리
- 기타 이주 관련 사항 등
- 보상지원 관련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보상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도단속
- 보상관련 집단민원 해소
- 보상관련 공청회 및 설명회
-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 기타 보상지원 관련 사항 등



13

해외 국방/군사도시 벤치마킹



14

버지니아주 알링톤카운티 (Arlington County, Virgi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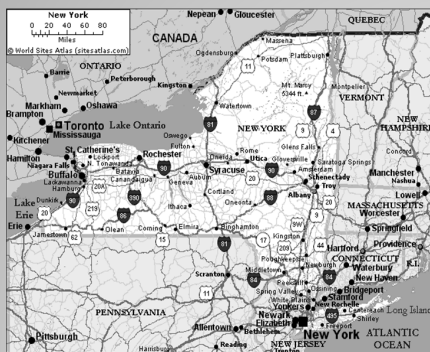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펜타곤과 워싱턴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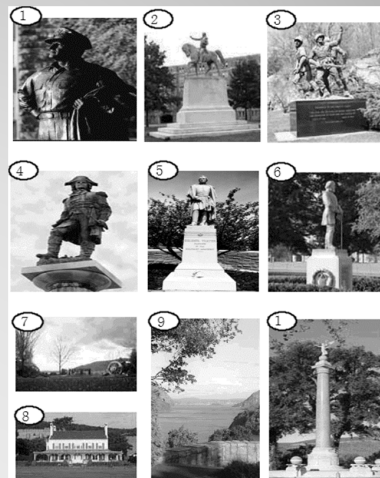
알링톤 국립묘지

- 공사기간 : 1941. 8 - 1943. 1
- 총면적 : 583 에이커
- 총공사비 : 8,300만 달러
- 펜타곤은 군인 및 민간인 약 23,000명이 근무하는 실질적인 미국의 국방도시이자, 가장 선호하는 안보관광지역
- 펜타곤 관광프로그램은 1976년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도보관광과 무료단체관광 가능

뉴욕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 하이랜드(The Town of Highlands)



뉴욕주에 있는 군관련 상징물



-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는 1683년 뉴욕주의 행정구역으로 지정,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 미육군사관학교가 하이랜드에 위치, 안보관광 명소화

□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미 육군본부 (U.S. Army Forces Comm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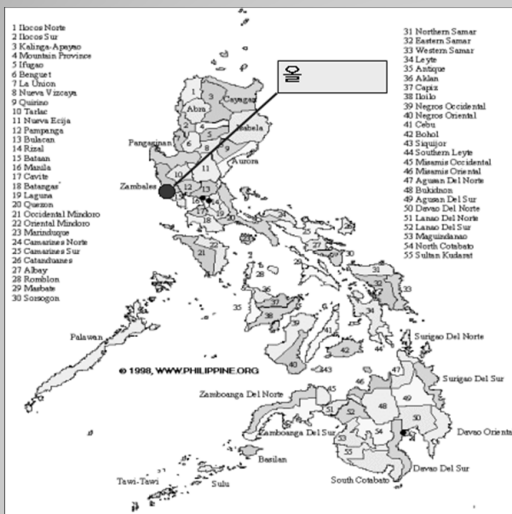


· 미육군본부는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약 1만여명 고용인들이 매년 아틀란타 경제에 약 5억달러 급여를 창출

· 미국 육군본부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남서쪽 Fort McPherson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3군단(Third United State Army)과 미국 예비군본부(U.S. Army Reserve Command) 위치, 세계적인 국방, 안보, 관광지역으로 발돋움

17

□ 필리핀 수빅만 올랑가포시 (Olongapo)



- 올랑가포시는 필리핀 루손섬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수빅만(Subic Bay) 관문근처 저지대 위치
- 올랑가포시는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1959년에 자치제를 시행하고, 1966년에 시로 지정
- 미국의 수빅 해군기지가 가까이에 위치함으로써 급속한 도시성장에 기여하였고, 20세기 상반기에 상업 및 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왔음
- 미군은 기지에서 철수하면서 1992년에 필리핀으로 반환, 현재까지 관광중심지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리조트로 인한 많은 관광객 유치

18

□ 큐슈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Sasebo]



- 한때 일본해군기지였던 사세보는 약 5,500명의 미군과 가족들, 문관들이 거주하고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과 군인 또한 사세보에서 활동중
- 항구 밖 다도해는 구주쿠섬(九十九島)의 경승지로 사이카이(西海) 국립공원을 이루고 시가지 서쪽의 유키하리산(弓張岳)·쇼칸산(賞觀岳) 및 동쪽의 에보시산(烏帽子岳) 등도 같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경승지를 이루고 있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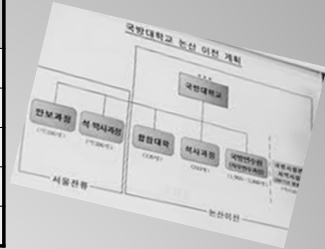
국방대~시.군간 상생 · 협력방안



20

□ 국방대~지자체간 상생 · 협력방안

인접 시군	면 적(km ²)	인 구(명) 2013.11	지역내총생산(억원) 2011
논산시	554.80	125,942	27,545
계룡시	60.71	40,993	4,748
공주시	864.27	116,534	28,768
금산군	576.69	55,352	17,283
충남 전체	8,204	2,046,550	848,817



군시설	위치	유발인원(명)	비고
계룡대	계룡시	110만	군문화축제
육군훈련소	논산시	130만	면회객 입영환송객
국방대학교	논산시	2,000	직무교육생 포함
육군항공학교	논산시	1,000	교육생 포함
계		240만 3,000	

21

□ 국방대~지자체간 상생 · 협력방안

논산시 국방대 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2014)

- ❖ 국방대 논산 이전
- ❖ 국방대 주 진입도로 개설 지원
- ❖ 국방대 부 진입도로 개설 (1차공사)
- ❖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 ❖ 국방대 팝오케스트라 및 논산시립합창단 상호간 초청 공연
- ❖ 국방대 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 ❖ 국방대 이전 시설공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 국방대 이전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원



22

□ 국방대~지자체간 상생 ·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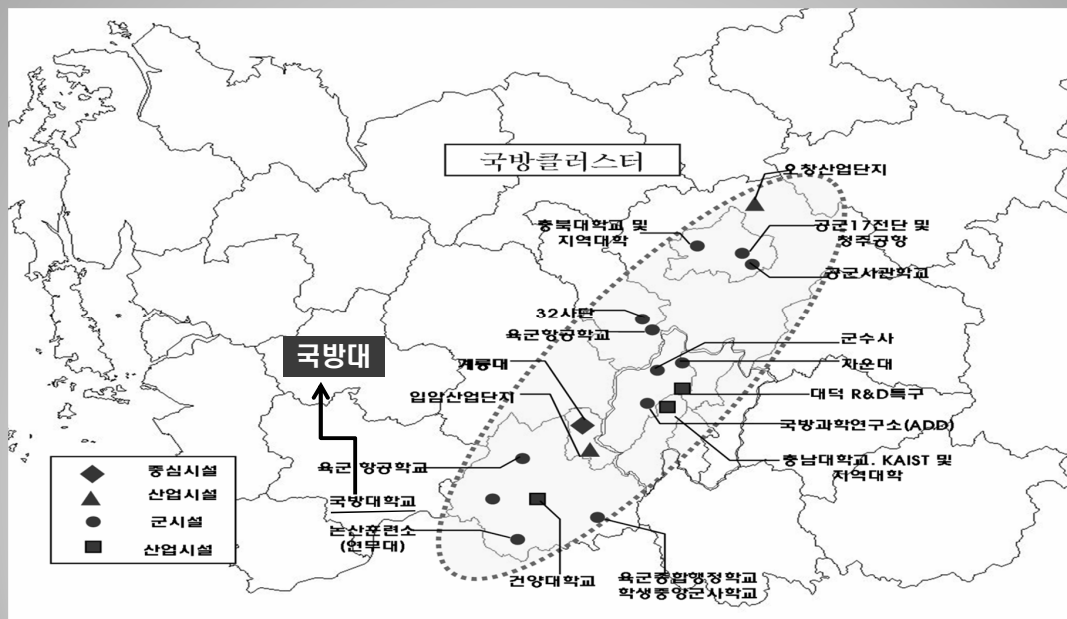
논산시 국방대 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2014)

-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 국지도 68호 확.포장
- 지방도 697호 확.포장
- 위 치 도
- 국방대 예정지 협의 보상
- 이주대책 지원
- 이주단지 조성
- 세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이주지원
- 이주단지 내 이주민 건강증진기구 설치
- 새롭게 펼치는 시책
- 이주마을 모형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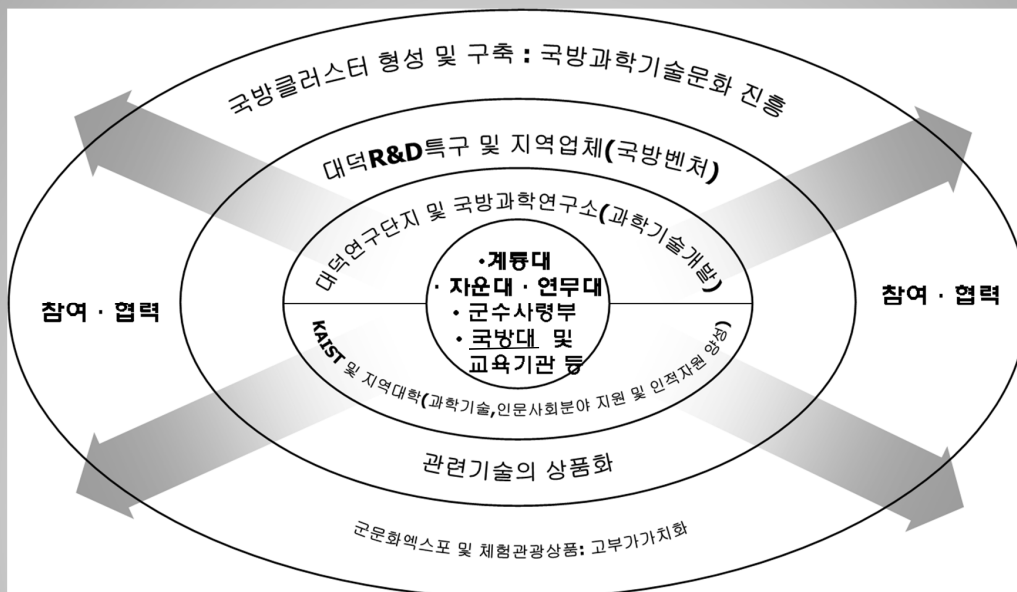
23

□ 광역충청권 국방클러스터 구축



24

□ 광역충청권 국방클러스터 확산모델



25

□ 갈등예방 및 상생·협력방안

갈등예방의 주안점

- 협력거버넌스의 자율성 인정
- 협상할 유인책 창출
- 갈등해결 및 협상당사자 선정
- 협력거버넌스의 범위, 대표자 결정
- 협상의 기본원칙 결정, 상호합의
- 정보와 협력거버넌스의 접근성 확보
- 상호 신뢰기반의 구축
- 전문적, 중립적인 제3자의 활용
- 갈등전문가 갈등현안 참여, 조력 제공



26

□ 갈등예방 및 상생 · 협력방안

협력적, 참여적 계획과정

-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과정
-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계획과정
- 역량 형성과정으로서의 계획
-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의 상호연계
- 소통, 대화, 역할분담, 책임공유
- 권리주장에 앞서 의무이행
- 상대적 사고(상호주관적 입장)
- 합리적 주장과 대안적 사고



27

□ 갈등예방 및 상생 · 협력방안

갈등예방의 효과

- 발전 저해하는 갈등요인 조기 제거
- 민군간 갈등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갈등해소를 통해 상생기반 조성
- 실효성 있는 갈등예방관리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 민군 간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 갈등해소 역량 및 성공적인 협력의 경험 축적
- 군의 사기진작 및 대군신뢰 강화

논산훈련소 영외면회로 달라진 충남 논산시

	면회 시행 전 (2011년 말)	면회 시행 후 (현재)	증감
일반음식점	1802개	1845개	+43
휴게음식점 (커피숍, 피자)	208개	271개	+63
편선	0개	200여개	+200

자료: 논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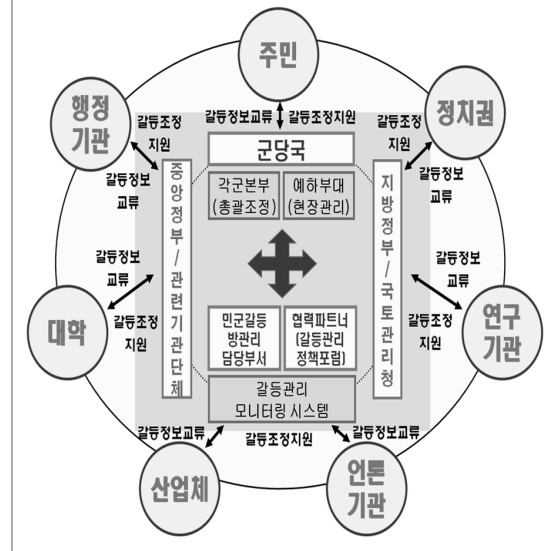


28

□ 갈등조정기구 설치 · 운영방안

민·군간 갈등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민·군간 갈등해소 및 협력의 총괄
- 조정기능 수행, 예하부대 현장관리
- 갈등 관련 정보의 실시간 교류 및
- 갈등지원·조정 담당
- 민관군산학연 상호협력체제 구축
-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정보제공 및
- 갈등지원·현장조정
- 제3의 조정·중재기관으로서 협력 파트너십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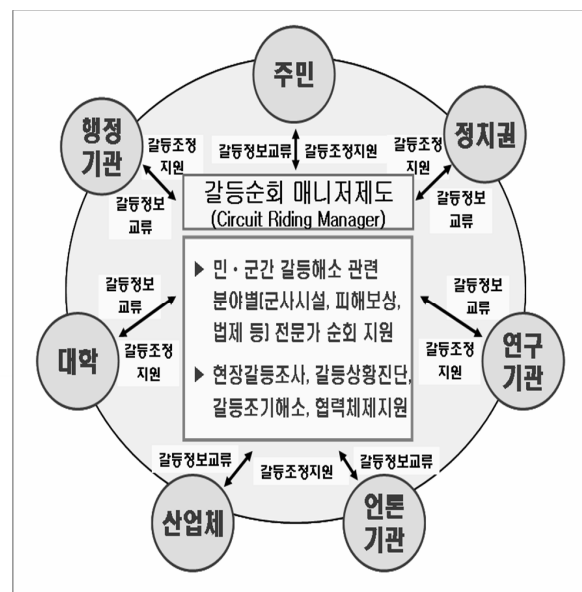


29

□ 갈등조정기구 설치 · 운영방안

갈등순회 매니저제도

- 소통과 의사전달 촉진기능 수행
- 갈등당사자 간의 합의형성 역할
- 갈등상황 진단 및 갈등영향분석
- 갈등해소 촉진을 위한 협력자
- 협력유도를 위한 중간조력자
- 갈등조사 연구자
- 전문적 갈등정보 제공, 지도자문
- 컨설팅 및 코칭의 역할 담당



30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교육훈련기관의 갈등교육과정 도입
- 공공·민간부문 갈등교육 및 갈등관리
- 갈등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 갈등전문 교육/연구기관 지정·운영
- (가칭)갈등조정사 자격증 제도 도입
- 갈등관련 전문기관의 협력 강화
- 갈등예방 및 해결 지원프로그램 운영
- 갈등관리 교육·훈련의 활성화
- 상생협력/갈등관리 협의체 운영
- 민군간 갈등현안 정보교환 및 연찬
- 국방대, 훈련소와 지자체간 협력강화



31

□ 국방대~지자체간 상생·협력방안



- 논산시(국방대/연무대)·계룡시(계룡대)·공주시·금산군 간의 '민관군협력 추진체제' 구축
- 특히, 민관군 정책현안 협의채널 확보 및 사전 갈등예방 기능강화
- 군은 지역 동반자/협력자로 공존

- 국가안보~지역안보 매개 역할
- 국방도시/군사도시/민군친화도시(親軍) 특성, 차별화 및 경쟁력
-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국방벨트 조성, 신지역경제권 조성
- 민관산학연 협력거버넌스 구축



32



감사합니다



제6주제

민 · 군 상생협약체 구성방안

최한규 (충남북부권포럼 상임운영위원장)

국방대학교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이전사업**

2014 . 11. 13

충남북부권역 상생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 안 규 박사

전쟁은 국가정책 수행의 한 수단이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 · 경제 · 외교 · 사상 등의 부분
적 역량이 통합된 국가총력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국력을 운영하는 군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은 각
기 자기의 전담 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타 기관의 업
무와 융합시키고, 협조된 정책과 계획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다.

- ▶ **교육기관은 1927년 영국의 국방대학이 창설되어 군 · 관 · 민의 간부들이 정치 · 경제 · 군사적 여러 요소를 조직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 ▶ **미국은 1946년에 워싱턴시(市)에 NWC(National War College:국방연수원)를 창설하고 3군에서 선발된 장교와 다른 정부기관의 요원을 입학시켜 고도의 정책, 지휘 및 막료로서의 기능, 전략계획작성 임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한국은 1955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국방대학으로 창립되었고, 1956년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 ▶ **교훈은 조국, 명예, 지성이다.**
- ▶ **1957년에 국방연구원으로 개칭하였다.**
- ▶ **1961년 국방대학원으로 개칭되었다.**
- ▶ **2000년 국방대학원과 국방참모대학(1990년 설립)을 해체하였다.**

국가안보종합대학인 국방대학교로

- ▶ 국방부장관의 관장하에 운영되었다.
- ▶ 각군(各軍) 대학을 이수한 고급장교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 ▶ 2003년 현재 3개 단과대학(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합동참모대학), 단기 직무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4개 교육관련기관(직무연수부 외)이 있다.
- ▶ 부설연구기관으로 안보문제연구소, 합동교리발전부가 있다.

- ▶ 2003년 현재 3개 단과대학(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합동참모대학), 단기 직무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4개 교육관련기관(직무연수부 외)이 있다.
- ▶ 부설연구기관으로 안보문제연구소, 합동교리발전부가 있다.
- ▶ 교육과정은 안보과정, 석사과정, 야간석사과정, 합동참모대학 정규과정, 직무연수부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 수업기간은 안보과정과 합동참모대학 정규과정이 1년(44주), 석사과정이 2년이며 8개의 직무연수과정은 1~12주까지 다양하다.

국가안보는 최고의 가치다.

- ▶ 왜적에 대항하기 위해 10만의 대군을 키워야 한다는 율곡(栗谷) 이이(1536-1584)의 ‘십만 양병(十萬養兵)설’ 이다.
- ▶ 이는 국가의 중요한 핵심과제가 국방이라는 뜻이다.
- ▶ 율곡이 십만의 양병을 건의했다는 것은 율곡 연보 계미년(선조 16년) 4월조와 사계 김장생이 지은 율곡의 「행장」, 월사 이정구가 찬술한 「율곡시장」, 백사 이항복이 찬술한 「율곡신도비명」 및 『선조수정실록』 임오년(선조 15년) 9월조에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후일 정설로 내려오게 된다.
- ▶ 선조 같은 무능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백성을 사랑하는 성웅 이순신 나라와 백성을 구했다.

- ▶ 국방대를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대(부지 112만^m²)로 이전하는 데는 566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국가안보는 최고의 가치다.
- ▶ 국방대학원은 3군 및 정부기관의 요원을 입학시켜 고도의 정책, 지휘 및 막료로서의 기능, 전략계획작성 임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 ▶ 국방대가 이전하면 교직원 518명과 학생 2874명이 이주하는 등 논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논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국방대 등이 연계된다. 논산이 국방인재 양성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 ▶ 따라서 인구유입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KTX 논산 정차역 신설

- ▶ 논산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들이 지역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지역 발전을 위한 건강한 동력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 ▶ **논산은 인구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
- ▶ **이는 논산훈련소 면회제도 부활이나 국방대학교 유치와 같은 호재와 더불어 최근 입주한 일련의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 **지역 발전의 동력은 생산시설의 유치에 있다.
(아산시, 한 기업에서 세수가 2천억 징수)**
- ▶ **게다가 국방대학이 입주한다면, 생기 있는 논산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 ▶ **논산은 인근 지역에 비해 기업유치에 매력적인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천안, 아산)**
- ▶ **무엇보다 공업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용이하다.**

- ▶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천안아산역 2 ~ 3km 이내의 지가가 평당 150만원 선으로 기업이 진출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 ▶ 오송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정지로서 개발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업종의 기업에겐 아무래도 차별이 예상된다.
- ▶ 공주는 다량의 문화재 매장 예상지역으로 토지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 논산의 경우 현재 필자가 KTX 교차역 신설 부지로 주장하는 채운면 인근의 지가가 평당 10만원 이하이다.
- ▶ 게다가 금강이 지척이라 풍부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부여, 익산, 계룡, 논산 등과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에 있으므로 물류 환경 역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 ▶ 이는 논산시민이 국방대학원을 유치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 첫째. 결론적으로 논산은 민관군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상생협력이 될 것이다.
- ▶ 둘째. 지역 내에 상생협의체가 결성되면 시너지 효과 크게 나타날 것이다.
- ▶ 셋째. 민.관.군 업무 협조 분야에 있어서 “지역 농산물 이용” (백령도 농수산물 전량 군부대 구매),

- ▶ 넷째. 관은 발 빠른 행정지원(아산시 기업유치)이 필요하다.
* 행정적 지원, 제도적 지원, 세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 ▶ 다섯째. 논산, 계룡, 금산, 공주의 유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특히 계룡은 풍부한 군 경력의 자원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 여섯째. 상호존중, 공동번영의 정신은 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부 록

충남 남부권포럼 일반현황

창립선언문

바야흐로 21세기는「상생·협력의 시대」이며, 「갈등해소의 시대」이다. 오늘날의 시대정신(der Zeit)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지난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추진의 과정에서 상생·협력 보다는 사회갈등, 공공갈등이 계속적으로 증폭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계와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상생·협력과 갈등해소를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활동과 개선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우리 사회를 보다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뜻 있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지한 담론을 형성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력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들어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번 표출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비용부담과 함께 힘겨운 주민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본다.

이에 우리는 공공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 효율적 예방과 이의 체계적인 해결 노력을 통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상생협력의 사회통합적 기틀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와 우리 사회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서로 돕고 이끌어 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믿는다.

이 포럼은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를 위한 포럼회원 다수의 자발적 참여의 촉진과 함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적 역량의 강화를 모색하고, 이론적 연구성과를 현장의 경험 및 대중적 지혜와 결합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를 더욱 생동감 있고, 더욱 알찬 '상생과 협력의 커뮤니티'로 성장·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하여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교환하는 '다자간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하여, 이러한 "담론형성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 있는 공론 형성'의 공간으로 조속히 자리매김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모든 회원들은 포럼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앞으로 회원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포럼이 항구적으로 우리 충남발전의 값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참여하고 성의껏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06. 10.

「남부권역상생협력·갈등관리 정책포럼」 회원 일동

I 충남 남부권역 포럼 일반 현황 및 개요

□ 설립과정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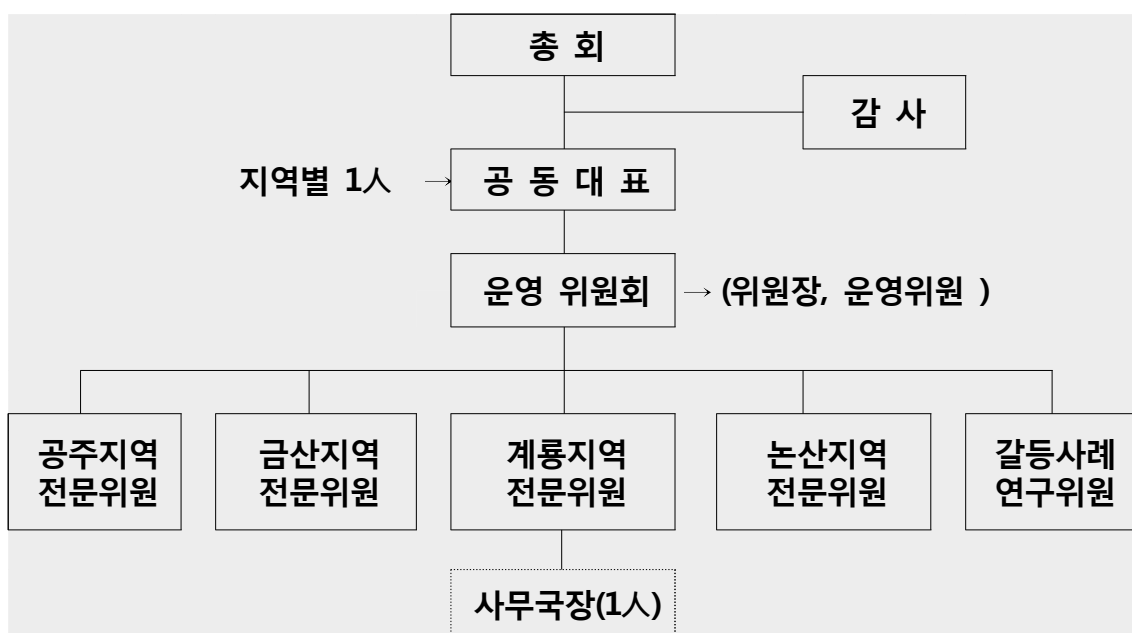
- 2006년 3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
- 2007년 10월 포럼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포럼 구성
- 2007년 12월 창립총회 및 포럼 개최
- 2008년~2010년 포럼활동 실시
- 2011년 갈등관리 전문교육, 계룡 농공단지 관련 간담회 개최
- 2012년 4월 4대 권역별 대표 간담회 개최(대전)
- 2012년 12월 계룡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와의 상생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 2013년 12월 상생협력 갈등관리 포럼 역할 재정립 간담회 개최
- 2014년 제1, 2차 2014 충남남부권역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개최

* 참조 : 충남포럼 홈페이지(<http://www.pcpf.or.kr>)

□ 기능과 역할

- 공주시.금산군.계룡시 .논산시 4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구축
-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 연구, 실천적 조정과 지원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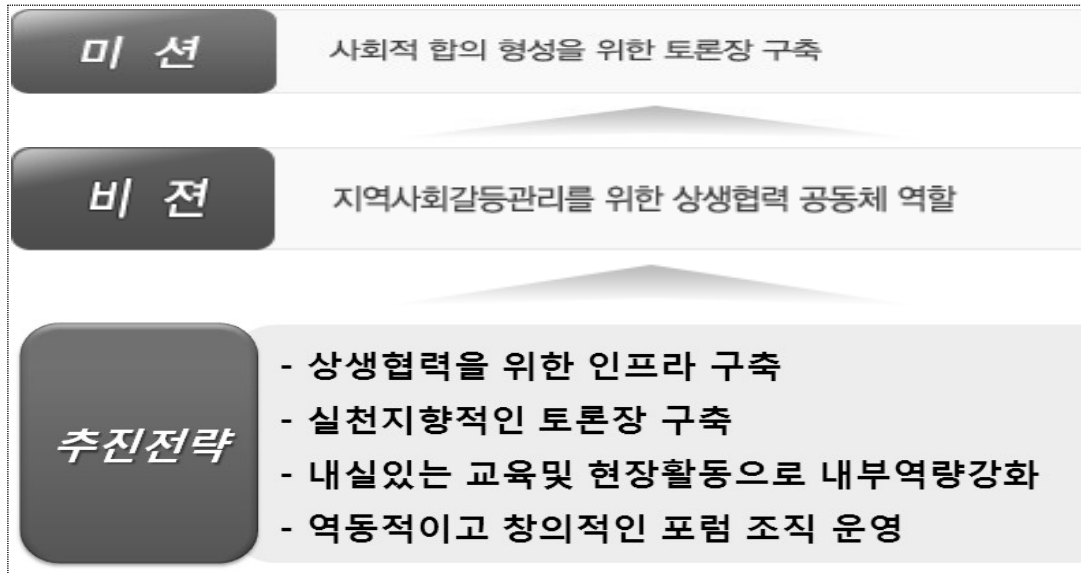
□ 조직구조 [2014년 조직 구성]



Ⅱ

2013 ~ 2014년도 사업계획(안)

□ 2013 ~ 2014 비전과 미션 체계 구축



□ 2013~2014 추진전략(4) 및 실천과제(11)

추진 전략	상생협력 인프라구축	실천지향적인 토론장 구축	내실있는 교육 및 내부역량 강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포럼 조직운영
실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군갈등예방과 해결관련 조례 제정 지원 ◇민관학연Network 구축 ◇정보교환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기중심에서 현장 활동가 위주의 토론장 구축 ◇지역별 갈등쟁점 중심의 토론장 구축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토론장 구축(지역인사가 말할 기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전문교육(1일 교육) ◇갈등관리 리더쉽 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정예의 전문가와 지역인사의 조화로운 운영 ◇지역별순환보직제도 정착

1.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간(기초-기초), 정부-주민간, 주민-주민간 갈등을 넘어서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연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정보교환 도모.

□ 시·군 갈등예방과 해결 관련 조례제정에 따른 실천 방안 마련

- (필요성)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 (2010. 11.10공포)후 2014년 09월 현재 남부권 각 시·군 조례 제정 완료후 실천 방안 요구.
- (방법) 지방의회의원, 지역민간단체등 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 시행 지원.

□ 민관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필요성)기존 한국공공행정학회·한국행정사학회 등 우수 학회 등과 MOU체결로 네트워크 구축
- (현황)충남발전연구원·공주대 산업과학연구원·선문대 정부간 관계연구소·호서대 행정조사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인재풀 활용
- (향후)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민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활용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교환 활성화

- (필요성)기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활용중이나 활성화에 미흡한 상태.
- (효과)정보교환 기능을 활성화하여 소통의 장 마련.

2.

지역별 사례중심의 실천지향적인 토론회 구축

4개 시·군 지역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중심적인 토론회 구축하고 이해당사자·시민사회단체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실질적인 토론회 구축 및 지역사회인사 참여 활성화.

□ 지역별 사례별 토론회 구축으로 현장쟁점토론회 구축

- 4개 시·군별로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별 4회 토론회 구축.
- 사례중심 토론회 구축으로 실질적인 해결방안 및 행동대안 제시.
- 지역운영위원과 지역전문위원이 직접 토론회 구축 모색.

□ 이론허당중심에서 현장활동가 중심의 토론회 구축

- 이론허당 중심의 학습활동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활동가의 입장과 갈등현실을 이해하는 장을 마련.

- 이론가와 현장활동가(지역주민)의 비율(6:4->4:6)조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

□ 지역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토론장 구축

- 갈등 사례에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역동적인 토론장을 구축하고 갈등해결의 기회를 제공.
- 충분한 사전 홍보 작업으로 토론 참여 유도.

3.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내부역량 강화

지역 전문위원의 갈등조정 능력 향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의 첨병 역할 할 수 있는 로컬 리더로서의 능력 배양.

□ 『갈등조정학교』 운영으로 갈등조정 능력 향상

- (대상) 지역전문위원,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중 참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집중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방법) 20여명의 지원자를 모집하여 국내 갈등영향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으로 집중적인 갈등조정 교육 훈련시행.
- (프로그램) 갈등조정전략 이론, 갈등조정 사례 연구, 갈등영향평가 과정 및 현장실습, 갈등조정 리더쉽 훈련 등 프로그램 진행.
- (기대효과) 갈등조정학교 이수자는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의 첨병 역할 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하여 지역사회 갈등조정자 역할 수행.

□ 지역별 전문위원 갈등관리 리더쉽 훈련 지원

- 지역 전문위원이 지역갈등현장에 투입 조정·중재할 수 있는 전문갈등조정인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
- 갈등영향분석 등 현장활동으로 실질적 갈등현장활동가 양성 목표.
- 지역갈등사례집중조사단 설치·운영으로 갈등관리 체계화.

4.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조직 운영

갈등관리 전문가 포럼 조직으로서 운영 내실화와 체계적인 내부 조직 관리로 지역사회 갈등관리 전문 민간단체로서의 위상 재정립 및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 소수정예의 전문가와 지역인사의 조화로운 운영

- (필요성) 그동안 포럼 조직 구성상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으나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에 따라,
- (방법) 소수정예의 전문가와 지역인사의 조화로운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이고 소외 지역 없는 조직 운영.

□ 지역순환보직제도 정착으로 지역 형평성 제고

- (필요성) 그동안 지역별 운영위원 및 공동대표의 수에서는 동수로 조직하였으나 특정지역에서 주도한다는 평가.
- (방법) 지역별 운영위원 및 전문위원의 동수 구성으로 형평성 제고하고 공동대표단의 순환 상임대표제도로 지역별 참여유도.

□ 투명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사무국 운영 방안 강구

- (방법) 대학연구소내(산학협동) 사무국 설치 및 운영으로 회계 투명성 확보

부 록

충청남도 및 남부권 각시군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조례는 도의 주요정책으로 도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8조(갈등영향분석)

-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도의회 및 시·군의회 소속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4장 갈등의 조정·해결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 ① 도지사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 ① 도지사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대학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포럼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현장 간담회 개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정기 간행물 발간·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제20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 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공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사항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 사항
3. 갈등영향분석 사항
4.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할 때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① 시장은 충청남도외의 갈등관리매뉴얼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 ①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 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을 추진한다.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41호,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갈등”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 2.“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범위)

-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중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갈등관리

제4조(갈등영향분석)

-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갈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 4.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 5. 사회적 영향
 - 6.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7. 그 밖에 군수가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7조(설치·기능) 군수는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1. 종합적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과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
- 3. 갈등영향분석
-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자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시민단체 대표
3. 금산군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금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1조(설치·운영)

-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위원은 군수가 해당 사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위원
2.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 ③ 협의회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되면 자동 해체한다.

제12조(의장 등)

- ①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갈등 각 사안별 분장사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이 경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협의위원”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비밀유지) 위원 및 협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심의 또는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96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계룡시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 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이 30%이상 되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시민단체 대표
 - 3. 언론인
 - 4. 시의회 소속의원
 -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

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① 시장은 충청남도의 갈등관리매뉴얼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 ① 시장은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 ①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현장 간담회 개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개최, 정기 간행물 발간·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제20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1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사업 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논산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8조(갈등영향분석)

- 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논산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의회 의원
 -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 해관계인·일반주민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4장 갈등의 조정·해결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① 시장은 충청남도의 갈등관리매뉴얼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 ① 시장은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 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는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35호, 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Memo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